

정부 중장기 계획 집행 실태 및 성과 평가체계 구축 연구

Government mid-and long-term plan
implementation and building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정부 중장기 계획 집행 실태 및 성과 평가체계 구축 연구

Government mid-and long-term plan implementation
and building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연구 기관 : 부산대학교
연구책임자 : 정혜진 교수

2020. 10. 31

안내문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 현 곤

제 출 문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부 중장기 계획 집행실태 및 성과 평가체계 구축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연구기관명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정혜진(부산대학교)

연 구 원 : 김지원(한국복지대학교)

자 문 : 탁현우(한국행정연구원)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 계획들을 K-SDGs의 성과 지표와 연계하고, 선별된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도출된 지표를 대상으로 Gap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의 목표 달성 수준을 분석하고, Gap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주요 중장기 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인적 자원 개발, 기술 및 산업발전, 기후 변화 대응 등 세 가지 항목이 도출되었다. 각 항목들과 관련하여 K-SDGs의 성과 지표 9개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 결과 인적 자원 개발에서는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기술 및 산업 발전 부분에서는 R&D 사업화 성공률, 기후 변화 대응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요 관리 대상 지표로 선정되었다. 세 지표 모두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목표치에 비해 실제 달성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R&D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 공식적인 지표 및 산식이 부재하여 지표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10개 중장기 계획의 전략체계도 등을 검토한 결과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등 세 가지 K-SDGs 목표 분야와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세 가지 정책목표 분야와 관련한 K-SDGs의 성과 지표는 총 9개가 도출되었으며 전문가 대상 AHP 분석 결과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분야에서는 인구10만명당 자살률(%),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분야에서는 소득격차비율(소득불평등 지수 지니계수로 대체)이 주요 관리 대상 지표로 선정되었다. 우선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의 경우 분석대상 기간('05-'18) 중 꾸준히 상승 추이를 보이나 여전히 2018년 기준 OECD 36개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 향후 복지국가에 대한 수요 증대와 저 성장시대 소득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공적 사회지출 비중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인구10만명당 자살률 지표의 경우 분석대상('08-'17) 기간 동안 OECD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OECD 전체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어 WHO의 자살예방을 위한 직군별 맞춤형 예방조치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병행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대표하는 지니계수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 2016년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7년 이후 OECD 평균치를 다시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주요 중장기 계획과 K-SDGs의 지표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포용적인 주거환경, 인권, 정의, 평화가 주요 목표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각각 9개의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계층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재난 사망자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그리고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선정되었다. 이들 주요 성과 지표에 대한 gap 분석결과, 사회재난 사망자수의 경우, 지표의 정의에 대해 부처 간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등의 자료를 각각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SDGs의 사회재난 사망자수와 국가 안전기본계획의 재난안전 사망자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일치성 확보도 요구된다.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 간의 추이를 고려할 때 달성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목표치 설정의 현실화와 함께 적극적인 달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과 5대 강력범죄 검거율 지표의 경우 모두 최근 목표치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후

1%p를 개선하기 위해 들어가는 한계 노력이 검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상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정주 여건 분야의 주요 계획의 K-SDGs 연계 목표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속적인 핵심 성과 지표관리의 필요성, 중장기 목표의 지향성 검토, 성과 지표의 적절성, 정책목표와 성과 지표 간의 일관성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목 차

요약문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1.2 연구 범위와 추진 체계	4
1.3 연구 방법	7

제2장 분야별 집행 및 성과 지표 도출

2.1 K-SDGs 기반 중장기 계획 집행 및 성과 관리 체계	11
2.1.1 K-SDGs 의의와 구조	11
2.1.2 K-SDG 목표별 주요 중장기 계획 연계	13
2.2 분야별 K-SDGs 성과 지표 도출	16
2.2.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16
2.2.2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19
2.2.3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22

제3장 분야별 성과 지표의 우선 순위

3.1 연구 설계	29
3.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31
3.3 사회복지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36
3.4 정주여건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40

제4장 분야별 성과 지표 Gap 분석

4.1 연구 설계 및 방법	47
4.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Gap 분석	48
4.2.1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률	48
4.2.2 R&D 사업화 성공률	50
4.2.3 온실가스 배출량	53
4.3 사회복지 분야 Gap 분석	56
4.3.1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56
4.3.2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58
4.3.3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기준)	60
4.4 정주여건 분야 Gap 분석	63
4.4.1 사회재난 사망인구	63
4.4.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67
4.4.3 5대 범죄 검거율	69
4.5 소결	7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연구 결과의 요약	75
5.2 정책 제언	76
5.3 연구의 한계	77

참고문헌	79
부록 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AHP 설문지	87
부록 2 사회복지 분야 AHP 설문지	92
부록 3 정주여건 분야 AHP 설문지	97

목 차

표

〈표 1-1〉 주요영역별 선정 계획	4
〈표 1-2〉 AHP 응답 체계 예시	7
〈표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주요법령 및 계획	14
〈표 2-2〉 주요 정책영역별 중장기 계획의 선정	15
〈표 2-3〉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17
〈표 2-4〉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측정 방식	18
〈표 2-5〉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19
〈표 2-6〉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측정 방식	22
〈표 2-7〉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23
〈표 2-8〉 심리적 정주여건과 관련된 K-SDGs 지표	25
〈표 2-9〉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측정 방식	26
〈표 3-1〉 AHP 집단평가 종합의 방법론	29
〈표 3-2〉 계층화 분석 응답 전문가 특성	30
〈표 4-1〉 분야별 AHP 분석에 따른 GAP 분석 지표	47
〈표 4-2〉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체계	55
〈표 4-3〉 경찰청 통계기준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현황	70

그림

<그림 1-1> 지속가능국가 비전	5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체계	6
<그림 1-3> Gap 분석 의미	8
<그림 2-1> 한국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2
<그림 2-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체계도	13
<그림 2-3>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21
<그림 3-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31
<그림 3-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32
<그림 3-3> 인적자원 개발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33
<그림 3-4> 기술 및 산업발전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34
<그림 3-5> 기후변화 대응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35
<그림 3-6> 사회복지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36
<그림 3-7>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37
<그림 3-8>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38
<그림 3-9> 건강하고 행복한 삶(사회)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38
<그림 3-10> 불평등 해소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39
<그림 3-11> 정주여건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40
<그림 3-12>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1
<그림 3-13>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2
<그림 3-14> 포용적인 주거여건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2
<그림 3-15> 인권, 정의, 평화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43
<그림 4-1>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Gap 분석('07-'16)	48
<그림 4-2> 사립대학의 운영 수지 추이('07-'18)	49
<그림 4-3>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Gap 분석('12-'18)	51
<그림 4-4>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위한 소요 비용	52
<그림 4-5>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Gap 분석('10-'17)	53
<그림 4-6> 전체 냉매 누적 출원건수 및 HFO계 냉매 출원건수('03-'17)	54
<그림 4-7>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총계(aggregated) 비중(2018년 또는 가장 최근치)	56

〈그림 4-8〉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Gap 분석('05-'18)	57
〈그림 4-9〉 전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018년 또는 가장 최근 가능치)	58
〈그림 4-10〉 인구10만명당 자살률 Gap 분석('08-'17)	59
〈그림 4-11〉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2018년 또는 최신 이용가능 자료)	61
〈그림 4-12〉 소득격차비율(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 기준) Gap 분석('09-'17)	62
〈그림 4-13〉 OECD 주요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64
〈그림 4-14〉 재난안전 사망자수의 Gap 분석('07-'17)	65
〈그림 4-15〉 사고발생 사망자수의 Gap 분석('95-'18)	66
〈그림 4-16〉 OECD Better Life Index의 Housing 관련 주요 지표의 우리나라 현황	67
〈그림 4-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Gap 분석('06-'18)	68
〈그림 4-18〉 밤거리를 혼자 거닐기 안전한가 지수의 국제비교	69
〈그림 4-19〉 국가별 치안지수(safety index) 현황	70
〈그림 4-20〉 5대 강력범죄의 Gap 분석('10-'19)	71



제1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 범위와 추진 체계
- 1.3 연구 방법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9년을 기준으로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계획은 553개에 달한다. 부처별로 소관 법률을 토대로 중장기 종합 계획 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매우 미흡하다. 예컨대,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중장기 계획 간 중복이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분야별 담당 기관과 부서가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여 해당 계획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여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률에 기반하여 의무적으로 수립된 각종 중장기 계획은 각 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즉, 중장기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계획별로 상세한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욱이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성과 지표들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 추진되고 있는 계획의 상시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운영 현황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 연구와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길곤 외, 2019; 한민규 외, 2018; 문해주 외, 2011; 김동건 외, 2006; 황용수, 2000). 첫째, 주요 계획들의 목표 수와 종류가 증가하고 세분화 되었으나 계획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비전, 5개년계획, 부문별 계획 간의 일관된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중장기 계획과 하위 부문 계획이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중장기 계획 분야에서의 소요 예산이 제대로 추계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비전만 담고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중장기 계획이 다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참여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 중장기 계획은 계획의 수립-시행-결과 과정에서 체계적인 점검 및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 계획들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제시되어 있는 성과 지표로 연동하여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의 이행 수준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들의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AHP 분석을 수행하여 분야별로 핵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별로 목표치 대비 달성 현황에 대한 Gap 분석을 수행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Gap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중장기 계획을 K-SDGs의 성과 지표와 연동하여 실제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관리를 통해 중장기 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범위와 추진 체계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고길곤 외(2019)의 연구에서 다룬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정주 여건 분야의 30개 주요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고길곤 외(2019)의 연구에서는 부처별 법령에 의해 수립 및 집행 중인 중장기 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범주에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평가되거나 타 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은 계획이 선정된 바 있다(표 1-1) 참조.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주요 영역별로 핵심 계획으로 선정된 계획들을 대상으로 K-SDGs의 성과 지표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표 1-1〉 주요영역별 선정 계획

사회복지영역	과학기술영역	정주여건영역
사회보장기본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융합연구개발활성화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중장기보육기본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주택종합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우주개발진흥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계획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노숙인등복지및자립지원종합계획	지능형로봇실행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 기본계획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항만기본계획

자료: 고길곤 외(2019: 10).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별로 선정된 주요 계획과 K-SDGs의 성과 지표를 연계하고자 한다. 부처별 중장기 계획은 국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중장기 계획과 K-SDGs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과 지표와 연계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은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4대 목표(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국가), 14개 전략 및 50개 이행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 체계 하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법률 및 계획, 부처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 여건과 관련된 주요 중장기 계획이 K-SDGs의 성과 지표와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지속가능국가 비전



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

둘째, 분야별로 다양한 성과 지표 가운데 우선 순위로 관리되어야 하는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계획별로 연관되어 있는 성과 지표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해야 하는 우선 순위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성과 지표를 선정하는 경우 향후 정권 및 계획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계획의 운영 실태를 점검 및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분야별로 도출된 우선 순위 성과 지표에 대한 Gap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은 각 중장기 계획들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계획과 관련된 주요 성과 지표의 최근 10년 달성 현황과 K-SDGs의 목표 수준과의 차이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선행연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러한 Gap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2〉는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 한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 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 계획은 K-SDGs의 성과 지표와 연계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 성과 지표를 도출한 후 각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실제 달성 현황 및 목표 간의 Gap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범국가적 목표와 성과 지표를 연계하여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 기획, 운영, 집행 및 성과 관리의 체계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 체계



1.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수행된 주요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K-SDGs와 연계한 뒤 핵심 성과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 분석은 미래의 정책 구성 요소 및 하위 항목요소들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한 후 이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지어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허성운 외, 2016). 즉,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복잡한 경우 이를 계층화 하여 주요 요인들을 쌍대 비교함으로써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조근태 외, 2003). AHP는 상위 계층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 계층에 있는 각 요소의 가중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응답을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AHP의 4가지 공리는 다음과 같다(허성운 외, 2016: 33). 먼저 역수성으로서, 동일한 계층 내에 있는 2개의 요인을 짝지어 비교하여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요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척도에 의해 표현되며, 셋째, 종속성은 한 계층의 요소들은 인접한 상위 계층의 요소에 대해 종속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대성은 의사 결정의 목적에 대한 사항을 계층이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표 1-2>는 AHP의 응답 체계의 예시를 나타낸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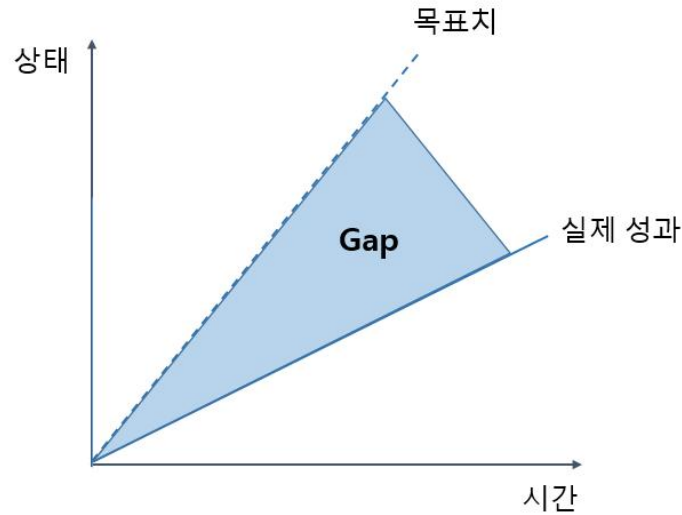
<표 1-2> AHP 응답 체계 예시

평가항목 (L)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R)
A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A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AHP는 적용 방법의 간결성과 의사결정이 직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별 성과 지표 가운데 핵심적인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Gap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존재하므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AHP로 도출된 우선 순위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목표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대한 Gap 분석을 수행하였다. Gap 분석은 경영학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기대와 인지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Gap 분석은 바람직한 성과(desired performance)와 실제 달성한 성과(actual performance)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Gelders & Ihlen, 2010).

〈그림 1-3〉 Gap 분석 의미



〈그림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Gap 분석은 현재의 상황과 현실을 정확히 분석한 후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과 목표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 과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각 지표별 Gap 분석은 K-SDGs의 성과 지표를 토대로 현재 상황(as-is)은 과거 추세를 제시하였으며, 목표치(to-be)는 K-SDGs에서 제시된 성과 목표를 토대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계획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Gap 분석을 통해 각 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

분야별 집행 및 성과 지표 도출

2.1 K-SDGs 기반 중장기 계획 집행 및 성과 관리 체계

2.2 분야별 K-SDGs 성과 지표 도출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1 K-SDGs 기반 중장기 계획 집행 및 성과 관리 체계

2.1.1 K-SDGs 의의와 구조

현 정부는 포용국가와 지속가능한 성장¹⁾을 강조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운영5개년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37, 54) 및 5대 국정목표(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강조된다. 나아가 정부혁신 12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되어 있으며(원구환, 2018: 7), 현재 주요 평가제도 즉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운영평가, 책임운영기관평가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지표로서 반영하고 있다. 저성장시대에 사회적 가치는 이해관계자들을 통합하여 역동적 균형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기 위한 필수적 시대요청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계획수립 및 집행,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사회적 가치와 긴밀하고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 개념은 학자마다 실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추상적인 편이다.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을 초월(혹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로 보는 견해(윤태범 외, 2017; 김기형, 2018: 206 재인용), 공공성과 공익성, 공동체 특성에 따라 가변적인 분배 가치(형평성 등)로 보는 관점(최현선, 2018) 등이 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019: 14)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 이익 달성을 위한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가치라고 하였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정부, NGO, 민간 등 모든 조직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하 SR)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었고 ISO26000²⁾, SDGs 등에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각 사회주체(정부·시민·기업 등)의 역할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김태영, 201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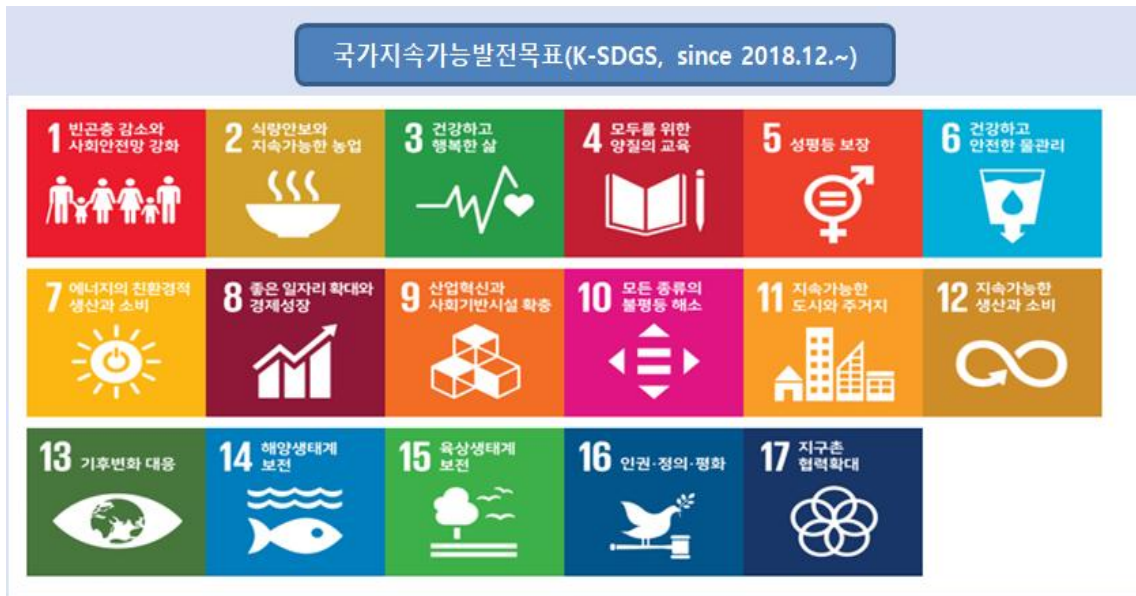
이 중에서도 글로벌 우선순위인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UN-SDGs)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이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며 '단 한 사람도

- 1) 지속가능발전법(시행 2015.12.01. 법률 제13532호) 제2조(정의)에 근거하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조 2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발하고 우리나라 포함 70여개 국가가 8회 총회를 거쳐 채택한 '기업의 사회책임의 국제표준'으로 ISO26000이 있으며 조직의 중요한 목적인 지 발전 전략과 계획들을 '사회책임'이라는 틀 속에 종합한 것이다.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총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³⁾. UN SDGs의 17개 목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내 맥락에 맞지 않는 세부목표도 존재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일원국으로서 2018년 12월 범부처간 협의 및 국민참여(사회적 공론화) 등 상향적 의사결정 방식에 입각하여 한국형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K-SDGs)를 설정하였다⁴⁾.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과 5대 전략(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을 내세웠다.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 요청인 UN-SDGs의 17개 목표를 이행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게 상기 비전과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143개 지표는 세부 목표치를 설정함)들을 설정하여 정부기관,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그룹 등 다양한 집단이 노력해야 할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2-1>, <그림 2-2> 참고). K-SDGs는 전체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⁵⁾.

<그림 2-1> 한국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자료: 지속가능발전 포털(<http://www.ncsd.go.kr/>, 검색일 2020.09.28.)

- 3) UN 홈페이지(<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globalpartnerships/>), 지속가능발전 포털 (<http://www.ncsd.go.kr/>)
- 4)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및 실무 테스크포스를 통하여 K-SDGs를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하여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절차를 거쳤다.
- 5)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ksdgs?content=2>, 검색일 2020.09.28.)

〈그림 2-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체계도



자료: 지속가능발전 포털(<http://www.ncsd.go.kr/>, 검색일 2020.09.28.), 환경부(2019)

이와 같이 K-SDGs는 한국 정부내 최상위 전략체계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정책수립 등 일련의 정책운영과정은 이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하위수준의 계획 상 전략체계도,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설정 등으로 이어질(cascading) 필요가 있다. 우선 K-SDGs가 관련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1.2 K-SDGs 목표별 주요 중장기 계획 연계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구체적 노력의 일환이자 최상위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체계도라고 볼 수 있는 K-SDGs의 주요 목표와 실제 우리나라 중장기 계획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사업의 개별 법령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환경변화와 정책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대응적(responsive) 정책수립과 구체적 전략 체계도에 입각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UN-SDGs의 17개 목표(Goals)는 K-SDGs 17개 목표로 반영되어 있으며 동 목표는 다시 주요 근거법률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연계될 수 있다. 목표별 주요 중장기 계획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주요법령 및 계획

K-SDGs	주요 근거 법률	주요 계획	주요 부처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보건복지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경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교육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평생교육법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국가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	교육부 고용노동부
성평등 보장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전국수도 종합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고용정책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국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종합계획 지역산업 진흥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 관련 법률	분야별 차별금지 및 약자보호 관련 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계획 국가환경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 기본계획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종합계획	해양수산부
육상생태계 보전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산지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산림청
인권정의평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탁금지법	-	법무부
지구촌 협력 확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 참고 저자들 재구성

중장기 계획 및 종합계획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관련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로 계획 간 연계 및 조정의 미흡, 정부주도의 단기적 기획, 사회적 수용도 측면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고길곤 외, 2019). 따라서 국가 상위계획 및 전략체계도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각 정부 부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 볼 수 있는 K-SDGs 관련 주요 목표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성과 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길곤 외(2019: 17)에 따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수조사한 우리나라 법정 중장기 계획은 총 533개이며⁶⁾,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중장기 계획 유형화를 시도한 바 크게 세 범주(사회복지영역, 과학기술영역, 정주여건 영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복지영역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과학기술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정주여건영역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포함한다. 물론, 이들 영역 간 경계에 위치한 계획들도 다수 존재하며 이들 간 연계도 상시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상기 정책영역 범주 분류는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SDGs와 중장기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중장기 계획의 전략체계도의 비전 및 미션 등을 토대로 K-SDGs 주요 목표와의 연계성을 찾고 구체적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길곤 외(2019)의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영역별 주요 중장기 계획(분야별 10개 선정)을 참고할 것이며 이는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2> 주요 정책영역별 중장기 계획의 선정

사회복지영역	과학기술영역	정주여건영역
사회보장기본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융합연구개발활성화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중장기보육기본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주택종합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우주개발진흥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계획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노숙인등복지및자립지원종합계획	지능형로봇실행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항만기본계획

자료: 고길곤 외(2019: 17)

6) 고길곤 외(2019)에 따르면 개별 법령의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71개로 전체의 13.32%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중장기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58개(10.88%), 환경부가 55개(10.32%), 보건복지부가 42개(7.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8개(7.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 교통, 해양, 환경 분야(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와 같은 '정주여건'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보전복지, 고용, 교육, 문화체육 분야(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와 같은 '사회복지' 관련 중장기 계획이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개별 기술과 산업 분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산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와 같은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2.2 분야별 K-SDGs 성과 지표 도출

2.2.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중장기 계획의 집행 및 성과 관리 구축 체계와 K-SDGs에서 제시한 성과 지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기 분야별 관련 중장기 계획 이외에도 해당 분야와 관련된 주요 계획들을 검토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길곤 외(2019)의 연구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10개 주요 계획들의 주요 미션과 전략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중장기 계획에서 지향하는 미션과 수립된 전략들과 구체적인 연계성이 있는 K-SDGs 성과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2-3>은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션, 목표 또는 추진 전략을 토대로 하여 선정된 K-SDGs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계획에 제시된 미션과 목표 또는 추진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K-SDGs 성과 지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K-SDGs 성과 지표의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포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주요 성과 지표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 계획이 과학기술혁신 전반에 걸친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계획과 달리 과학기술 영역 뿐만 아니라, 창의 및 융합형 인재 양성 목적을 위한 교육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과 과학교육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지식 습득 중심의 인재 양성에서 벗어나 지식 창출 및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 역량 제고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주로 성과 지표와 투입 지표에 대한 빈도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개발비의 투입 측면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GDP 연구개발비 비중은 약 4.81%로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환율 적용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5위에 달한다(KISTEP, 2019). 이처럼 많은 연구 개발비의 투입은 자연스럽게 R&D 활동으로 인한 성과물의 사업화(commercialization) 성공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과 지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R&D에 대한 투입이 경제적 성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기는 European Paradox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사업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필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온난화 및 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정책적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의 상향 조정 등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이상훈, 2014).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계획들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 중 과학기술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에서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비전 및 목표(주요 전략)		K-SDGs 성과 지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연구개발비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고등학교 이수율 학업성취도 국제 평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 창조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연구개발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연구 혁신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을 통한 더 큰 도전, 더 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국민-기업이 함께 하는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으로 혁신 창출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혁신으로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나노 선도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혁신 선도 기술 구현 나노기술 산업화의 글로벌 리더 	
제3차 우주개발 진흥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연구개발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부터 중소형 위성 산업체 주도발사 2035년까지 샘플귀환선 발사 2034년까지 국가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2030년까지 국가위성 민간기업 주도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계일류국가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연구개발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지구 공간개발과 기반조성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기반 완성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완성이 세계적 두뇌 유입기반 마련 과학벨트 내 첨단 과학기반 산업체 유치 및 혁신역량 강화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비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첨단 신소재부품 100대 기술 개발 가상공학 플랫폼 등 미래형 소재 부품 인프라 구축 GP 사업 확대를 통해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등 	
제3차 지능형 로봇기본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봇 산업 시장 규모 확대('23년 15조원) 1천억원 이상 로봇 전문기업 수 확대('23년 20개) 제조로봇 보급 대수 확대('23년 70만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비전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친환경차 확대 •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 • 신재생 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 •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자생력 확보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 산업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R&D 시스템 혁신 •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 중장기 R&D 활성화 토대 마련 • 핵심기술 전략 투자 		

한편, 주요 계획들과 관련이 있는 K-SDGs 성과 지표를 관련 있는 주제로 유형화하면 다음 <표 2-4>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고등학교 이수율,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GDP 대비 고등 교육 정부 부담률은 인적자원 개발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표들은 특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며, 창의적 역량 제고, 미래 수용 대응을 위한 이공계 대학 교육 혁신,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집행실패 조사 및 성과 관리 차원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비, 자원생산성,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은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와 산업 성장을 위한 투입, 성과 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성과 지표들은 R&D 활동에 대한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성장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친환경차 확대 등과 같은 지표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집행 및 성과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2-4>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측정 방식

분야	성과 지표	측정 방식
인적 자원 개발	고등학교 이수율	고등교육단계의 학력소지자 수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학업 성취도 국제평가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GDP에서 차지하는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비율
기술 및 산업 발전	GDP 대비 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자원생산성	GDP를 국내 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으로 나눈 값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성과조사 대상 연도의 R&D 과제 중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과제의 비율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친환경차 확대	연도별 친환경차 보급 수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	IPCC에서 제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산출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2.2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고길곤 외(2019)의 연구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요 계획들이 보장하는 영역을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 근거)을 근거로 할 때, 주요 4대 삶의 영역인 총괄, 건강보장, 사회서비스, 고용교육, 소득보장 영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기 범주에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평가되거나 타 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은 계획을 중심으로 10대 중장기 계획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집행 및 성과 관리 구축 체계와 K-SDGs에서 제시한 성과 지표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선 주요 사회복지분야 10대 중장기 계획의 미션과 전략 등 전략체계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주요 중장기 계획에서 지향하는 미션과 수립된 전략들과 구체적 연계성이 높은 K-SDGs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2-5>는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중장기 계획 내 전략체계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션, 목표 또는 추진 전략 등을 토대로 선정된 K-SDGs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계획에 제시된 미션과 목표 또는 추진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K-SDGs 성과 지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중장기 계획과 연계가능성이 높은 K-SDGs 성과 지표는 K-SDGs의 17개 목표 중 세 가지 목표 범주와 연계성이 높고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즉, 중장기 계획의 성과 지표들은 빈곤층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등 세 가지 분야로 재범주화 될 수 있다.

<표 2-5>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사회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	비전 및 목표(주요 전략)		K-SDGs 성과 지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2023)	비전	•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 빈곤율 • 국민연금납부율 • GDP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 OECD 더 나은 삶의 질지수 • 소득격차비율
	목표	• 국민 삶의 질 향상 [OECD 20위('23)⇨10위('40)]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2023)	비전	• 건강한 국민, 든든한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 OECD 더 나은 삶의 질지수 • 인구10만명당 자살률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수명 연장('16년 73세 ⇨ '23년 75세) • 건강보험 보장률('17년 62.7% ⇨ '23년 70.0%)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2016-2020, 수정본)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	• OECD 더 나은 삶의 질지수 • 고령자(55세이상) 고용율 • 노인빈곤율
	목표	• 삶의 질 향상 • 성 평등 구현 • 인구변화 적극 대비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 계획 (2018-2022)	비전	•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	• OECD 더 나은 삶의 질지수 • 소득격차 비율
	목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체계 개편 •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 부모 양육지원 확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 (2018-2022)	비전	•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	• OECD 더 나은 삶의 질지수 • 인구10만명당 자살률
	목표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2018-2022)	비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	•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
	전략	• 지역사회 삶이 가능도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5 개년계획 (2015-2019)	비전	• 장애인노안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 수준 향상	→	•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
	추진 과제	•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개선 •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제1차 노숙인등의복지및자 립지원 종합계획 (2016-2020)	비전	•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노숙인의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	• 상대 빈곤율 • GDP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목표	• 예방-재활-자립까지의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 • 주거-의료-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현황실태조사를 통한 근거중심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목표	•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	• 상대 빈곤율 • GDP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 인구10만명당 자살률 • 소득격차비율
	추진 과제	• [사각지대] 빈곤 사각지대 해소 • [보장] “국민 최저선” 보장 • [탈빈곤] 빈곤탈출의 사다리 복원 • [예방]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 [이행 기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18-2022)	비전	•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연한 대한민국	→	• GDP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추진 과제	•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 실현 •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 나라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분야 10개 중장기 계획 전략체계도 검토를 통해 도출된 세 가지 KSDGs 연계 목표분야별 총 9개 성과 지표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K-SDGs의 첫 번째 목표 분야인 빈곤층 감소 및 사회안정 전망 강화와 연계되는 지표로 '상대 빈곤율, 국민연금납부율, GDP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중장기 계획에서 가장 연계성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지표는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이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2023) 제1차 노숙인등의복지 및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 등 5개 중장기 계획과 연계성을 지닌다. 또한 중장기 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 '상대 빈곤율(연계 계획 3개), '국민연금납부율(연계 계획 1개) 순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K-SDGs의 세 번째 목표 분야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과 연계되는 지표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고령자(55세 이상) 고용율'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중장기 계획에서 가장 연계성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지표는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이며 을 들 수 있으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 -2023),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 수정본),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등 5개 중장기 계획과 연계성을 지닌다. 또한 중장기 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연계 계획 3개), '고령자(55세 이상) 고용율(연계 계획 1개) 순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K-SDGs의 세 번째 목표 분야인 건강하고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와 연계되는 지표로 '소득격차 비율, 노인빈곤율,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중장기 계획에서 가장 연계성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지표는 '소득격차비율'이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등 3개 중장기 계획과 연계성을 지닌다. 또한 중장기 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연계 계획 2개), '노인빈곤율연계 계획 1개) 순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논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K-SDGs 기반 주요 중장기 목표 3개 분야별 9개 성과 지표의 측정방식은 다음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6〉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측정 방식

분야	성과 지표	측정 방식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상대 빈곤율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 빈곤율(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국민연금 납부율(%)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유형별, 성별)의 보험료 납부율(%)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사회지출 즉, 국가가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규모의 비중(%)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자살인구 수(%)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OECD 발표 지수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지표(시민참여, 교육, 안전, 주거, 소득, 고용, 삶의 만족도, 환경,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하여 각국의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는 지수(BLI; Better Life Index)
	고령자(55세 이상)고용률	55세 이상 고령자인구 집단 내 취업자 수 비율(%)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소득격차 비율	지니계수, 팔마비율 등
	노인빈곤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1/2 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 비율(%)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우리사회 고용, 교육 등 생활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 존재 및 정도

2.2.3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앞서 분석한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 계획의 집행 및 성과 관리 구축 체계와 K-SDGs에서 제시한 성과 지표를 연결하기 위해서 고길곤 외(2019)의 연구를 토대로 정주여건과 관련된 주요 계획들을 검토하였다.

다음 〈표 2-7〉은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계획들의 주요 미션과 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K-SDGs 성과 지표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원래 고길곤 외(2019)의 연구에서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 계획은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중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전국항만기본계획의 경우 연계되는 K-SDGs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K-SDGs와 연계가능한 8개의 중장기 계획의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K-SDGs 성과 지표의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았으며, 크게 주거, 교통,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7〉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목표 및 전략		K-SDGs 성과 지표
국토종합계획 (2006~2020)	목표	•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국토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 주거급여수급가구 및 재정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전략	• 국토의 여건과 전망, 국토활용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권력별 발전방향 등	
주택종합계획 (2013~2022)	목표	• 중장기적으로 국민 주거복지 증진,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 주택시장 안정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사망자수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 친환경차 확대 수 • 친환경버스 확대 수
	전략	• 인구·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주택시장 환경변화, 주거문화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주택정책 비전 수립과 정책방향 재정립	
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목표	• 국가교통부 소관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확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사망자수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 친환경차 확대 수 • 친환경버스 확대 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 •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도로의 환경 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방안 •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방안 및 재원확보,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방안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2018~2027)	목표	•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버스 기반의 교통 체계로의 전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사망자수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 친환경차 확대 수 • 친환경버스 확대 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교통여건 분석,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권역별 노선 선정 • 간선급행버스체계 권역별 우선순위 선정, 재원분담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 •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건설계획 운영 효율화 방안 • 환경친화적인 건설 및 운영방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	목표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 수질등급달성률 • 생태하천복원율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국가에너지효율지표 • 미세먼지 나쁨일 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여건변화와 역할 분석 • 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시 • 투자계획과 계획완료에 따른 미래상 등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목표	•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 수질등급달성률 • 생태하천복원율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국가에너지효율지표 • 미세먼지 나쁨일 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성과 분석 및 평가, 미래사회 변화 전망,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 등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목표 및 전략		K-SDGs 성과 지표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2013~2017)	목표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수립	→
	전략	• 여건과 전망, 기계획의 성과분석, 환경보전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및 전략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016~2025)	목표	• 대기질 개선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 제시	→
	전략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오염원별 주요 저감대책 등	
국가물류기본계획 (2016~2025)	목표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해·공 물류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 국가 물류의 종합적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	→
	전략	• 여건 분석, 물류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별 추진 과제, 정책효과 및 추진로드맵 등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2016~2020)	목표	•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	→
	전략	• 미래 항만물류 여건과 물동량 전망, 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중장기 투자계획 및 효과분석 등	

• 관련 K-SDGs 없음

첫째, 주거와 관련된 지표와 관련하여 국토종합계획과 주택종합계획이 있다. 사실 국토종합계획은 주거, 교통, 국토개발 및 환경 등 정주여건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슈와 계획을 담고 있는 가장 상위계획이다. K-SDGs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지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및 산업개발의 관점보다는 취약계층보호나 환경보전 관점의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주거 분야와 관련된 K-SDGs 성과 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주거급여수급가구 및 관련 재정 등 주거취약계층 문제의 해소에 대한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같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교통과 관련된 지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물류나 수송의 효율성 측면의 지표보다는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교통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인 국가도로종합계획,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에서는 주요 전략으로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과 연계 제시하고 있으나, K-SDGs에서는 이러한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보다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약자 이용편의와 같은 안전이슈와 함께 녹색교통이나 친환경버스 등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환경분야에서는 K-SDGs가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졌던 것을 반영하여 대기와 수질, 폐기물과 같은 환경관련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중장기 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대기환경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과거 수질이나 토양을 중심으로 하던 기초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K-SDGs 지표로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미세먼지 나쁨일 수 등 대기환경 관련 지표와 함께, 수질등급 달성률이나 생태하천 복원률과 같은 수질환경 관련 이슈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이슈와 연계하여 국가에너지효율지표나 친환경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분야도 해당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주거, 교통, 환경 등 물리적인 정주여건과 더불어 심리적인 정주여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주여건에서 중요한 지표로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살펴 본 주거 및 교통, 환경 분야 지표와 더불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심리적 정주여건에 대한 인식지표로서 K-SDGs의 목표 중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과 ‘인권, 정의, 평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고려하였다. 이들 목표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포함하여, 앞서 살펴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포함하여 자연재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안전수준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 정의, 평화’에서는 5대 범죄,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가청렴지수나 정부신뢰도 같은 정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보공개나 디지털 인권보호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주여건 등도 포함하고 있다.

〈표 2-8〉 심리적 정주여건과 관련된 K-SDGs 지표

K-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치	소관부처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인구십만명당)	0.12(‘17) → 지속감소 / “재난연감” 및 부서 내부 검토	행안부 국토부
인권, 정의, 평화	5대 범죄 검거율(%)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78.8(‘17) → 지속확대/ 부처내부계획	경찰청
	국가청렴지수	통계산출방법 개발 / 국가청렴지수 측정모형(‘19년~‘20년 개발)에 따름(국민권익위)	권익위 국조실
	아동학대 발견율	주요국(미국 9.4%, 호주 8%) 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OECD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경찰청 복지부
	정부신뢰/만족도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만족도 평가결과	전 부처
	알권리와 정보공개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국제평가	지속위 행안위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수립과 이행	지속위
	디지털 인권보호	사이버폭력 건수	지속위 여가부 법무부

이상에서 논의한 정주여건과 관련된 주요 중장기 계획들과 연계된 K-SDGs 성과 지표를 관련 있는 주제로 유형화하면 다음 <표 2-9>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주여건은 주거, 교통, 환경이 주요 정책분야로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심리적 정주여건에 해당하는 안전과 신뢰 등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 틀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크게 3가지 분야로 정주여건을 재구조화하였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포용적인 주거여건’, 그리고 ‘인권, 정의, 평화’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과 같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지표와 더불어, 사회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포용적인 주거여건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더불어, 교통환경 개선과 생활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고려하였다. 도시공원 면적은 도시환경과 시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과 관련된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인권, 정의, 평화와 같은 심리적 정주여건은 5대 범죄 검거율과 같은 생활환경의 안전성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부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였다.

<표 2-9>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 지표 측정 방식

분야	성과 지표	측정 방식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도별 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 감소
	사회재난 사망인구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포용적인 주거여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소한의 주거면적 및 필수설비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의 비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환경과 시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 1인당 확보한 도시공원의 면적
인권, 정의, 평화	5대 범죄 검거율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등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
	부패인식지수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정부신뢰	중앙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제3장

분야별 성과 지표의 우선순위

3.1 연구 설계

3.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3.3 사회복지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3.4 정주여건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3.1 연구 설계

앞서 도출한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K-SDGs 지표를 대상으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지표를 AHP(계층화 분석법) 방법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AHP 분석방법은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평가자의 직관이나 지식, 경험 등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대안에 대해 대안 요인 간 쌍대비교를 통한 판단을 활용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계층화 분석법은 Satty(1972)가 개발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이다.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방법이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AHP의 중요한 특징은 계층화와 통합화라고 할 수 있으며(이창효, 2000: 150), 이를 통해 인간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총합화 시키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박용성, 2012: 91). 이러한 AHP 분석방법은 AHP는 ‘문제정의 및 계층의 설정 → 평가 지표와 평가지표별 도입방안의 쌍대비교를 통한 자료 확보 → 평가지표 및 도입방안의 우선순위(가중치) 도출 → 종합적인 CI 및 CR 검증 → 개별 의사결정의 통합’의 과정을 거쳐 분석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계층구조와 도입방안에 대해 고유치법을 활용하여 개별 가중치와 CR을 도출한 뒤, 개별 가중치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 AHP 집단평가 종합의 방법론

구분	평가지 통합법	산술평균 가중치 통합법	기하평균 가중치 통합법
통합산술식	$\bar{a}_{ij} = \prod_{k=1}^n (a_{ijk})^{1/n}$	$\bar{w}_i = \frac{1}{n} \sum_{k=1}^n w_{ik}$	$\bar{w}_i = \prod_{k=1}^n (w_{ik})^{1/n}$
분석절차	개인별 쌍대비교 ↓ 개인별 CR 검증 ↓ 집단 쌍대비교 도출 ↓ 집단 가중치 및 우선순위 도출 ↓ 집단 종합평가 도출		개인별 쌍대비교 ↓ 개인별 CR 검증 ↓ 개인별 가중치 및 우선순위 도출 ↓ 개인별 종합평가 도출 ↓ 집단 종합평가 도출

자료: 조근태 외(2003).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정책분야를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의 3가지로 크게 나누고, 국정운영 전반의 관점에서 이들 정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계층화 분석법을 통해 각 분야별로 주요 정책목표를 선정하고, 각 정책목표별로 주요 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각 정책

분야는 3개의 정책목표와 각 정책목표별 3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결과로 각 정책분야의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요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들 지표에 대한 Gap 분석을 이어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의 정책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하위 정책목표와 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정책분야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

계층화 분석을 위해 총 2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9명, 사회복지분야 9명, 그리고 정주여건 분야 8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각 분야별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2〉 계층화 분석 응답 전문가 특성

구분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직업군	교수	1	3	2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3	3	5
	공무원	0	1	0
	기타	5	2	1
경력	3년 미만	2	4	3
	3년 이상 ~ 5년 미만	1	0	0
	5년 이상 ~ 10년 미만	1	3	3
	10년 이상	5	2	2
나이	30대	3	4	1
	40대	4	4	6
	50대	1	0	1
	60대 이상	1	1	0
성별	남성	8	4	4
	여성	1	5	4
총합	9	9	8	

3.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관련 주요 계획을 토대로 K-SDGs 분야 내에서 인적자원개발, 기술 및 산업발전,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총 9개의 주요 성과 지표를 발굴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의 증대, 기술 및 산업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 기술과 산업의 혁신 및 발전, 기후변화 대응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을 의미한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인적자원 개발의 주요 지표는 고등학교 이수율,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부담율이 선정되었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고등교육단계의 학력소지자 수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학업 성취도 국제평가는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 그리고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은 GDP에서 차지하는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비율로 측정된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기술 및 산업발전이며, 주요 지표는 GDP대비 연구개발비, 자원생산성,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로 구성된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자원생산성'은 GDP를 국내 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또한,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은 성과조사 대상 연도의 R&D 과제 중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과제의 비율로 정의된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친환경차 확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주요 지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친환경차 확대'는 연도별 친환경차 보급 수, 그리고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은 IPCC에서 제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산출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측정한다. 한편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 정책목표로 선정할 이유는 성과 지표 선정의 근거가 된 K-SDGs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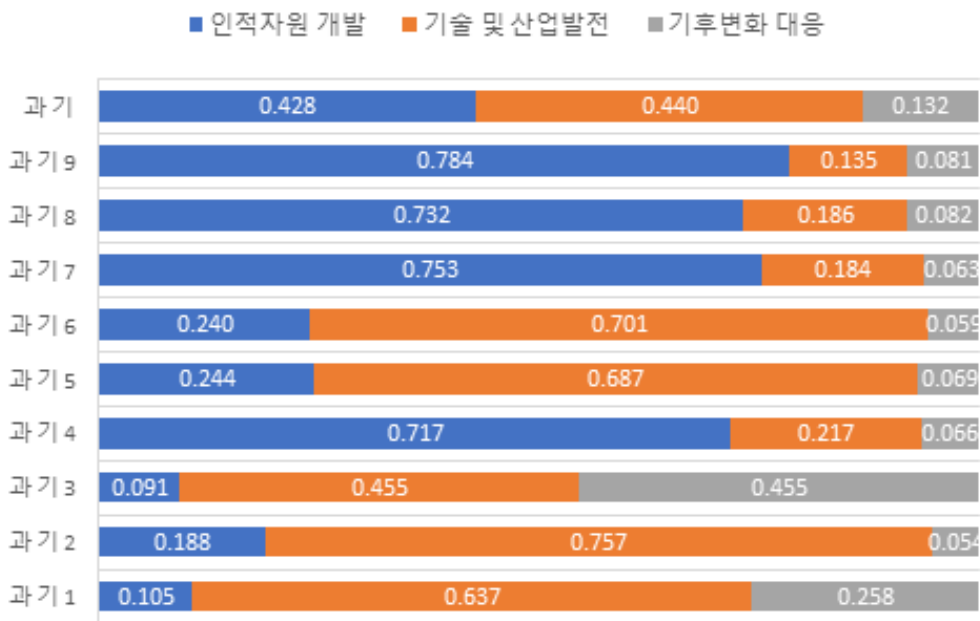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계층화 분석의 구조는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먼저,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기술 및 산업발전이 0.440로 가장 높고, 인적 자원개발이 0.428,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 0.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적자원개발과 기술 및 산업발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개별 전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개발을 1순위로 응답한 전문가가 4인, 기술 및 산업발전이 5인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1순위라고 응답한 전문가도 2인이 있다. 분석결과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는 크게 교육 분야와 과학기술분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 및 산업발전이 교육과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이며, 그 결과로 해결할 사회문제의 성격을 가지는 기후변화 대응 또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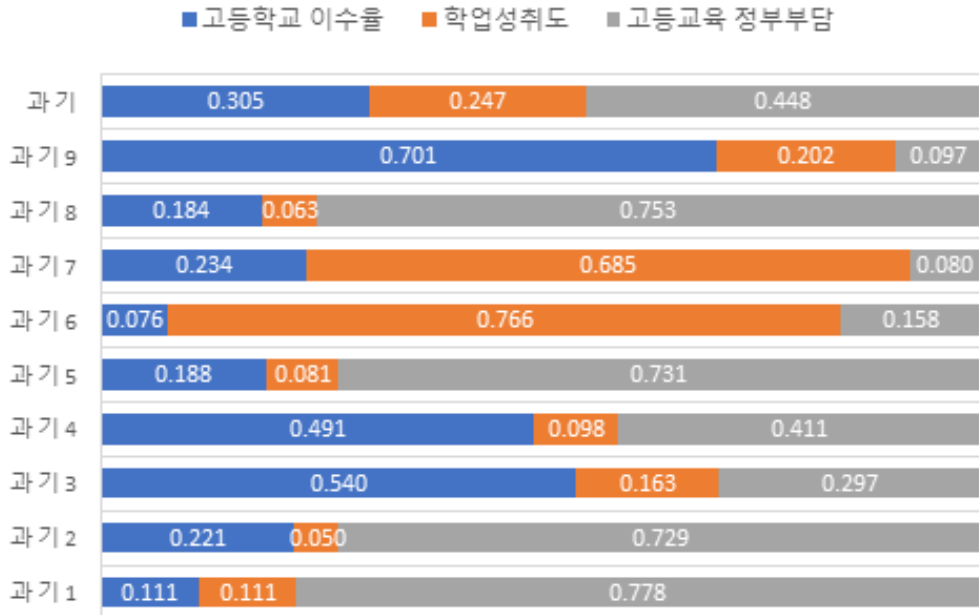
〈그림 3-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과기'는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과기 1'~'과기 9'는 개별 응답자의 결과 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첫 번째 정책목표인 인적자원 개발의 주요 성과 지표인 고등학교 이수율 학업성취도, 고등교육 정부부담 중 고등교육 정부부담이 0.44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뒤를 이어 고등학교 이수율은 0.305, 학업성취도는 0.247로 나타났다. 결국 인적자원 개발 목표를 위한 주요 성과 지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인 자금 투입이라는 투입지표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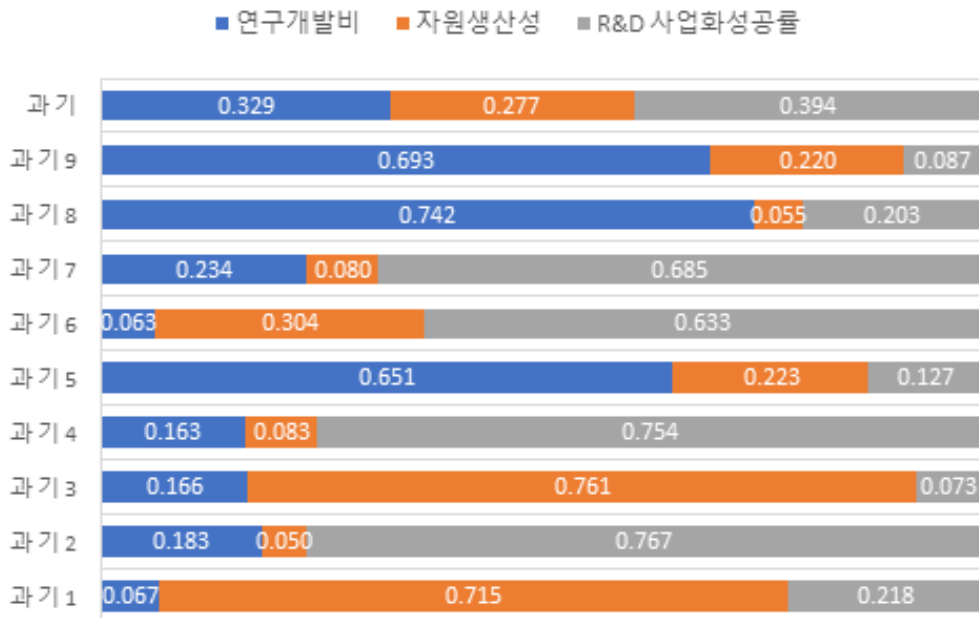
〈그림 3-3〉 인적자원 개발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과기'는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과기 1'~'과기 9'는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두 번째 정책목표인 기술 및 산업발전에 대한 주요 지표들 간 중요도는 대체로 유사한 가운데, R&D 사업화 성공률(0.394)이 근소하게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자원생산성은 각각 0.329와 0.277로 나타났으며, 1순위로 나타난 R&D 사업화 성공률과 차이는 크지 않아, 지배적인 성과 지표가 존재하기 보다는 3가지 성과 지표를 골고루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개별 전문가의 응답을 살펴보면, 3가지 지표에 대해 전문가마다 중요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R&D 사업화 성공률이라는 산출지표와 연구개발비 투자라는 투입지표가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과기 3번과 과기 1번 응답자의 경우 자원생산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책목표에 대한 응답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다른 응답자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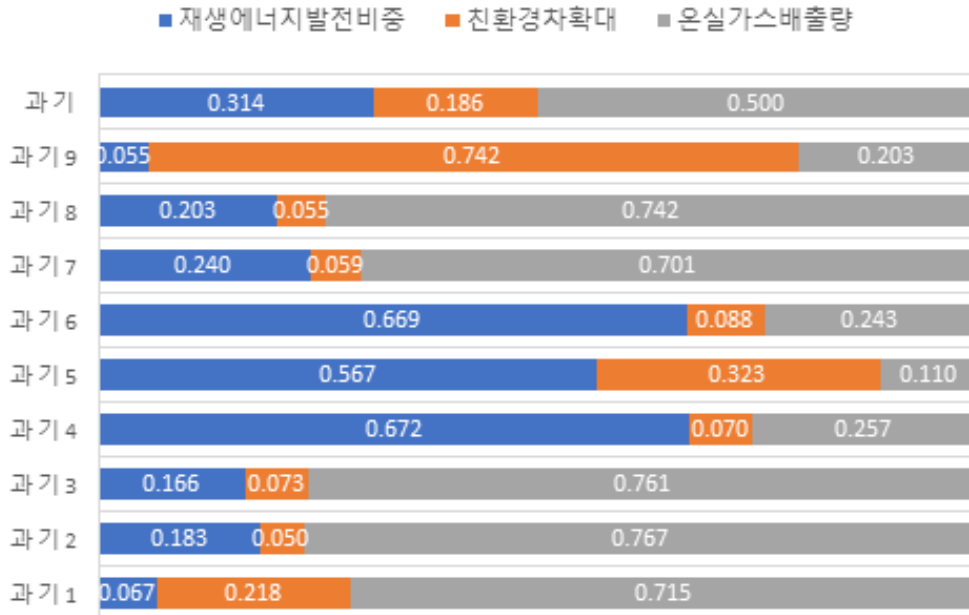
〈그림 3-4〉 기술 및 산업발전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과기'는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과기 1'~'과기 9'는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목표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산출지표가 0.50으로 지배적인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투입(혹은 과정)지표인 재생에너지발전비중(0.31)과 친환경차 확대(0.1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가장 중요하면서 지배적인 지표라고 응답한 전문가도 일부 존재한다. 정책목표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과기 3 과 과기 1의 경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요성을 더욱 지배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기후변화 대응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과기'는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과기 1'~'과기 9'는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3.3 사회복지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사회복지 분야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주요 계획으로 하여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불평등 해소 등의 주제로 총 9개 주요 성과 지표를 발굴하였다.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보장 수준,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은 아동, 모성,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질과 건강 보장, 그리고 불평등 해소는 나이, 성별,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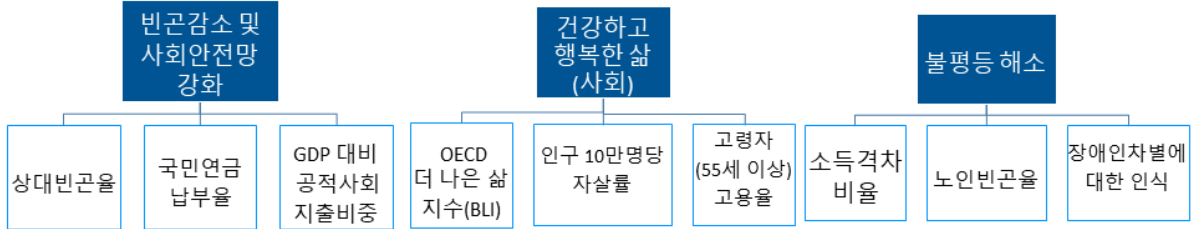
첫 번째 정책목표인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성과 지표는 상대 빈곤율, 국민연금 납부율,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으로 구성된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 가치분소득 50% 기준 상대 빈곤율(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로 측정하며, ‘국민연금 납부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유형별, 성별)의 보험료 납부율로 계산된다. 또한,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사회지출 즉, 국가가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규모의 비중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사회)의 주요 성과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고령자 고용율로 선정하였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자살 인구 수(%)로 측정되며,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는 OECD 발표 지수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지표(시민참여, 교육, 안전, 주거, 소득, 고용, 삶의 만족도, 환경,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하여 각국의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는 지수(BLI; Better Life Index)이다. ‘고령자(55세 이상)고용율’은 55세 이상 고령자인구 집단 내 취업자 수 비율(%)로 정의된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이며, 소득격차 비율, 노인 빈곤율,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주요 성과 지표로 제시하였다. ‘소득격차 비율’은 주로 지니계수나 팔마비율, 양극화 지수 등으로 측정한다. ‘노인 빈곤율’은 OECD의 상대적 빈곤율 정의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1/2 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 인구 비율(%)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 고용, 교육 등 생활 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 존재 및 정도를 정성적으로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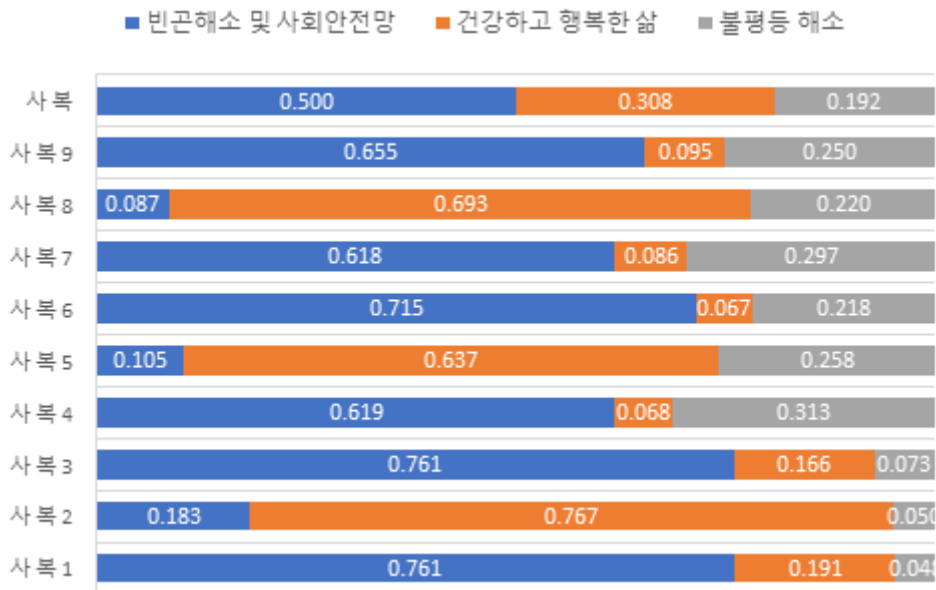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계층화 분석 구조는 다음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사회복지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것은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보이며, 50%에 가까운 중요도를 가져 지배적인 정책목표로 판단된다. 그 뒤를 이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0.37)과 불평등 해소(0.1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롤스의 정의론에 부합하는 Maximin Principle의 관점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보인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6명,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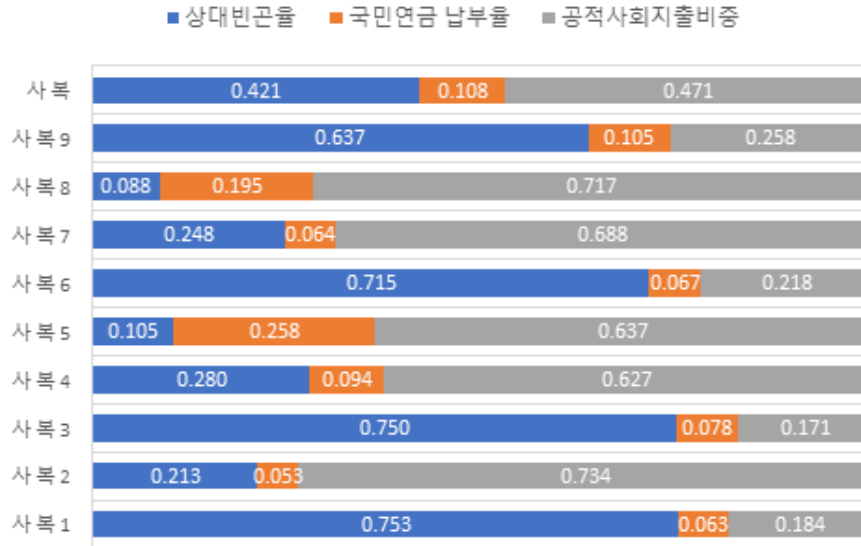
〈그림 3-7〉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사복'은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사복 1'~'사복 9'는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첫 번째 정책목표인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의 주요 성과 지표 중 투입지표의 성격을 가지는 공적사회 지출비중이 0.471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상대 빈곤율도 0.421로 나타나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성과 지표로 공적사회지출비중이라는 투입지표와 상대 빈곤율이라는 결과지표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율은 0.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빈곤대비수단 보다는 아직까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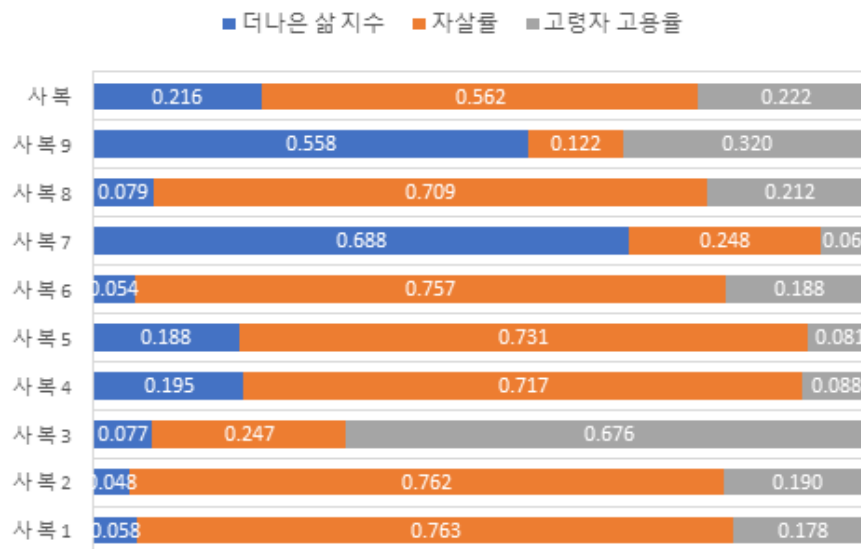
〈그림 3-8〉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사복'은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사복 1'~'사복 9'는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두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사회)이라는 목표에 대해, 자살률(0.562)이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지표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률(0.222)과 더 나은 삶 지수(0.216)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률은 노후보장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되는 풍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삶(사회)의 결과지표로서 자살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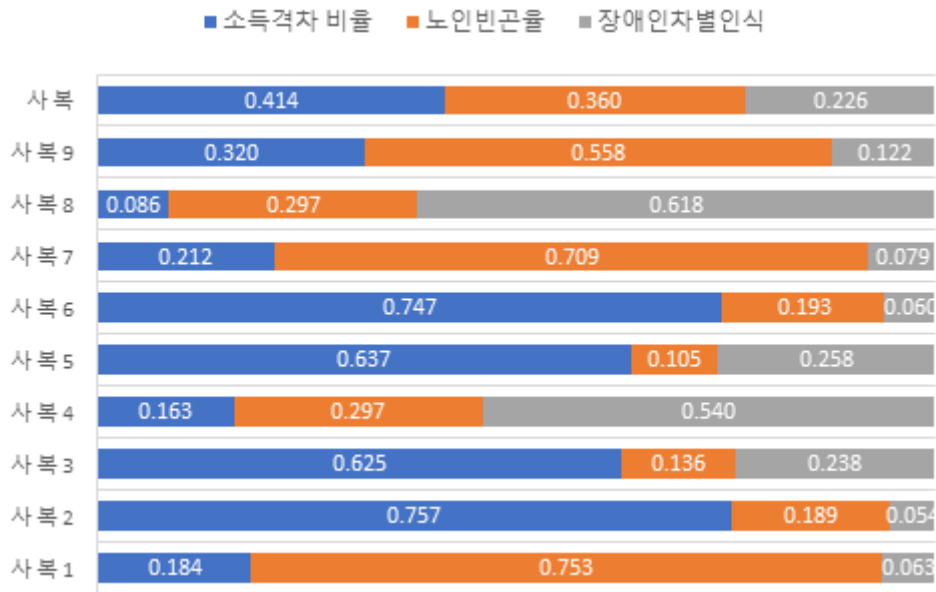
〈그림 3-9〉 건강하고 행복한 삶(사회)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사복'은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사복 1'~'사복 9'는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세 번째로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소득격차 비율(0.414)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 해소가 곧 소득격차의 해소라는 점에서 tautology적인 성격을 가진다. 소득 이외에 노인(0.360)과 장애인(0.226)이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은 근소하게 노인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응답자 중 일부(3인)는 노인빈곤율을 불평등 해소의 주요 성과 지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인식을 주요 성과 지표로 인식하는 경우도 2명 존재한다.

〈그림 3-10〉 불평등 해소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사복'은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사복 1'~'사복 9'는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3.4 정주여건 분야의 우선순위 성과지표 도출

정주여건 분야는 국토종합계획 등을 주요 계획으로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포용적인 주거여건, 인권·정의·평화 등의 주제로 총 9개 주요 성과 지표를 발굴하였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정주환경을, 포용적인 주거여건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여건을, 마지막으로 인권, 정의, 평화는 정주여건 중 정치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여건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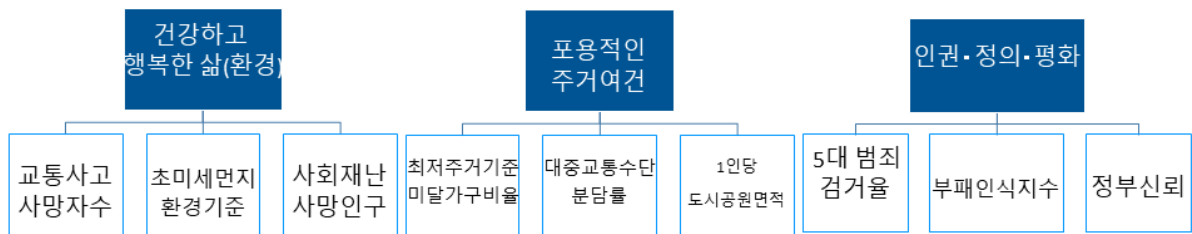
첫 번째 정책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에 대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사회재난 사망인구를 주요 성과 지표로 선정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도별 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 감소를, ‘사회재난 사망인구’는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로 정의된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포용적인 주거여건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주요 성과 지표로 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최소한의 주거면적 및 필수 설비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로 정의되며,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의 비율로 측정된다. 또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도시환경과 시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 1인당 확보한 도시공원의 면적을 의미한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인권, 정의, 평화는 K-SDGs의 세부목표의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5대 범죄 검거율, 부패인식지수, 정부신뢰를 주요 성과 지표로 한다. ‘5대 범죄 검거율’은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등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로 정의되며,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정부신뢰’는 중앙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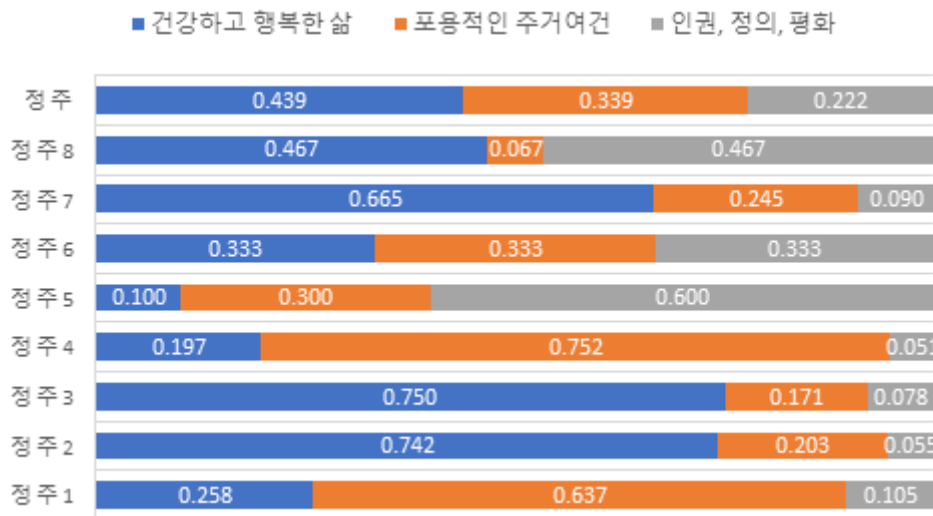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계층화 분석의 구조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정주여건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정주여건은 물질적인 생활환경과 제도나 인식과 같은 추상적인 생활환경을 통합하여 주요 목표를 도출하였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이 0.439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용적인 주거여건은 0.339, 인권, 정의, 평화는 0.222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인권, 정의, 평화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정주여건에 대한 목표를 보다 중요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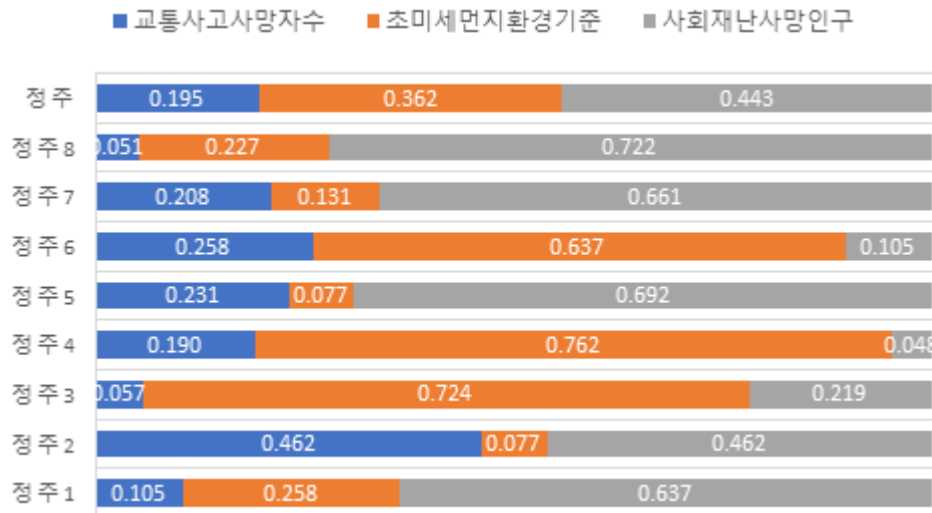
〈그림 3-12〉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정주'는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정주 1'~'정주 8'은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첫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이라는 목표에 대해 사회재난 사망인구가 0.443으로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0.362,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0.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 사망인구는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 폭발, 해양, 가스, 유도선, 환경오염, 공단 내 시설, 광산, 전기(감전),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붕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부정적 결과로 이를 줄이는 것이 안전사회로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준수는 일상생활의 환경개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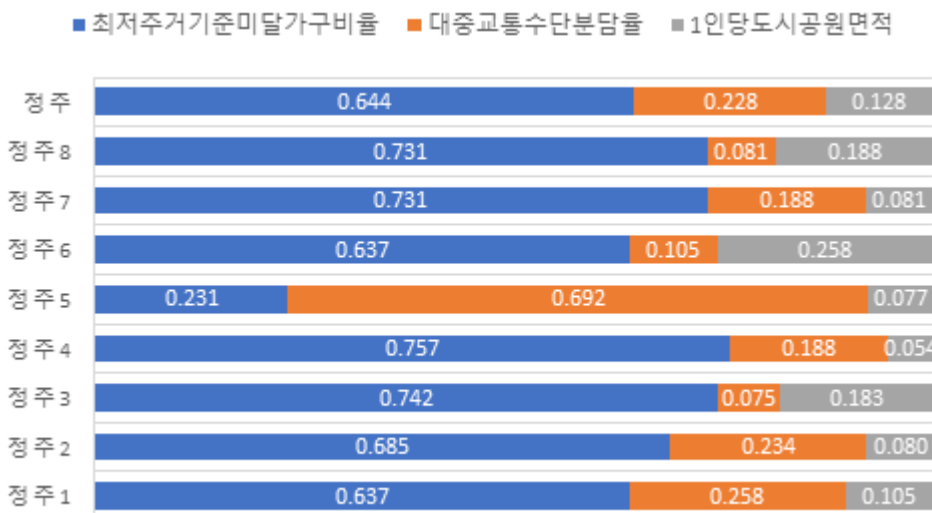
〈그림 3-13〉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정주'는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정주 1'~'정주 8'은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두 번째로, 포용적인 주거여건 목표에 대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0.644)이 압도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지표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수단 분담율(0.228)과 1인당 도시공원면적(0.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주거안정이 확보된 이후, 이동의 자유와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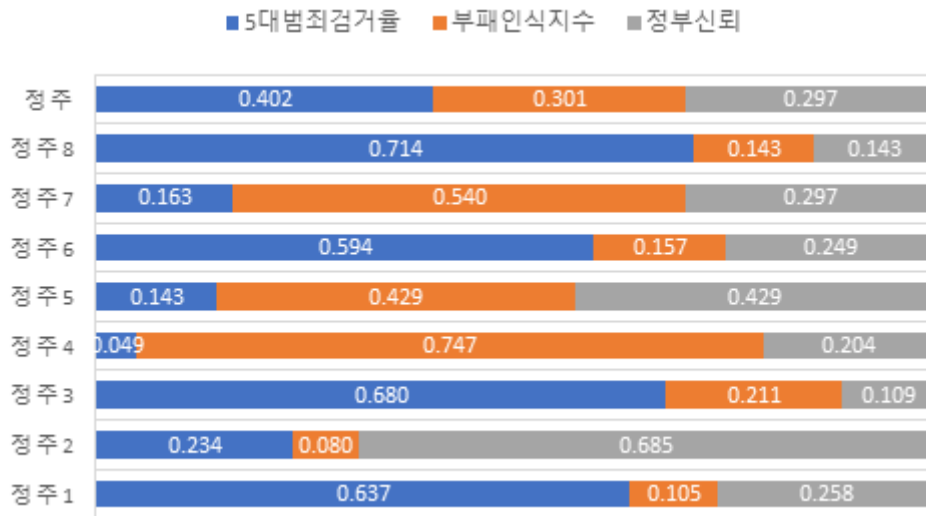
〈그림 3-14〉 포용적인 주거여건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정주'는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정주 1'~'정주 8'은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세 번째로, 인권, 정의, 평화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들 간에 명확한 중요도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5대 범죄검거율이 가장 높은 중요도(0.402)를 나타냈으며, 정부신뢰와 부패인식지수는 각각 0.297과 0.301로 거의 같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추상적인 목표에 대해 인식에 기반한 지표보다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분석결과와 달리 3가지 성과 지표가 응답자에 따라 1순위로 선택된 성과 지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인권, 정의, 평화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 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



주: 가장 위의 '정주'는 응답자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며, '정주 1'~'정주 8'은 개별 응답자의 결과값을 나타냄. 또한, 모든 응답자의 CI값은 0.3 이하를 만족하였음.



제4장

분야별 성과 지표 Gap 분석

- 4.1 연구 설계 및 방법
- 4.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Gap 분석
- 4.3 사회복지 분야의 Gap 분석
- 4.4 정주여건 분야의 Gap 분석
- 4.5 소결

4.1 연구 설계 및 방법

Gap 분석은 경영학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기대와 인지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Gap 분석은 바람직한 성과(desired performance)와 실제 달성한 성과(actual performance)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Gelders & Ihlen, 2010). 이에 본 연구는 제3장에서 분석된 분야별 AHP 결과를 토대로 우선 순위가 높은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Gap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 <표 4-1>은 각 분야별 관리대상 우선 순위 지표와 지표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Gap 분석은 실제 성과 지표와 목표 수준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5~10개 연도 내외의 자료를 토대로 추세치를 분석하도록 한다.

<표 4-1> 분야별 AHP 분석에 따른 GAP 분석 지표

분야	세부 분야	성과 지표	지표 출처
교육 및 과학기술	인적 자원 개발 지표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OECD 「Education at a Glance」
	기술 및 산업 발전 지표	R&D 사업화 성공률	국회 국정감사 각 연도
	기후변화 대응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회복지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	OECD 「Society at a Glance」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인구10만명당 자살률(%)	WHO「Mortality Database」 OECD 「Health at a Glance」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OECD. 「Society at a Glance」, 통계청 DB
정주여건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사회재난사망인구	재난연감
	포용적인 주거여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주거실태조사
	인권, 정의, 평화	5대범죄검거율	경찰청 통계자료

아울러 본 연구는 각 분야의 세부지표 가운데 우선순위 지표별로 Gap 분석을 수행한 이후, 해당 지표의 목표치와 실제 성과 간의 Gap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08.17-2020.08.21 기간 동안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성과 지표의 Gap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성과 지표의 목표 설정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과 더불어 문헌 검토를 수행하여 향후 중장기적으로 해당 성과 지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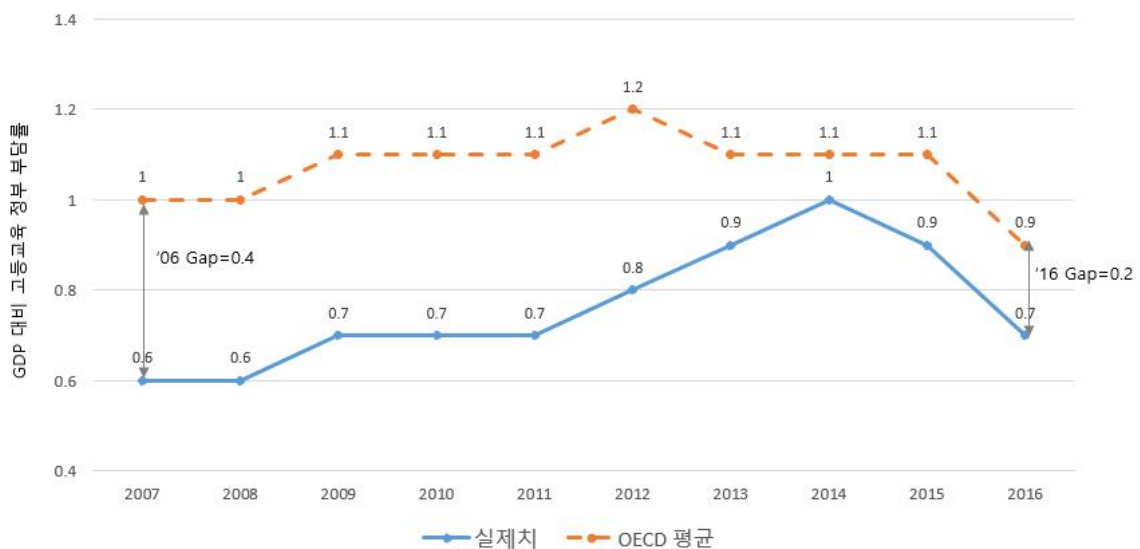
4.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Gap 분석

4.2.1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률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 지표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는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K-SDGs의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제시된 지표이다.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은 OECD의 연도별 「Education at a Glance」에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지표는 발표 연도보다 3년 전 자료 수록하게 되어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자료는 2016년도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K-SDGs의 2030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이다. 다음 <그림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은 2007년 0.6%였으나 2014년도까지 1.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0.7%에 그쳤다. 2007년부터 2016년 간 국내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은 0.76%인 반면, OECD 평균은 1.07%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OECD 평균과는 약 0.31%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Gap 분석('07-'16)



자료: OECD(10-19) 자료 재구성.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의 목표와 실제치 간의 차이는 국내 교육 예산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 우선 해당 지표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GDP 대비 고등교육 교육비는 정부, 민간, 해외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OECD 정부 재원의 평균은 0.9%인 반면 민간 재원은 0.5%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정부 재원은 0.7% 수준으로 대학 투자의 많은 부분을 민간 재원 1.1%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OECD, 2019: 268).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가 적은 이유는 그 동안 교육 재정의 많은 부분을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에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초·중·등 교육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정부는 3.1%, 민간은 0.5%로 OECD 평균값과 매우 유사하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에 대한 목표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재정 규모 확대 기준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으로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소요 재정에 대한 객관적 추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서영인 외, 2019). 이는 OECD 각 국가의 경제상황이 유동적이고 OECD 평균이라는 수치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에 관한 의사결정의 목표치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타개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규모 설정에 있어서 표준 교육 원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준 원가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한 예산으로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고등교육재정에서 표준 원가는 폭 넓게 정부가 고등교육법 제7조에 의한 대학 지원 노력에 수반되는 재정 지원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영인 외, 2019: 33).

<그림 4-2> 사립대학의 운영 수지 추이('07-'18)



자료: 서영인 외(2019: 72).

둘째, 현재 고등교육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다(서영인 외, 2019). 경제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만 세수입의 일정비율로 고정된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직접 확보, 간접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중 재정의 직접적 확보는 내국세 일정 비율 연동, 지방교육재정의 일부 투입, 국세분 교육세 전환 및 세수확대, 고등교육세 신설 등과 같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서영인 외, 2019).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재정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사립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 반값 등록금으로 인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과 입학금 폐지 등의 환경적 변화로 인해 심각한 재정 결손을 경험하고 있다. 다음 <그림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사립 대학의 재정건정성이 급속히 저하되었고 이러한 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 이후에는 균형예산편성의 관점에서 적립금을 인출하여 집행하고 있다(서영인 외, 2019). 2018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17.72억 원이며, 전문대학의 평균 재정적자는 9.06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제한 등과 같은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재원을 교육 외 분야에 지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2.2 R&D 사업화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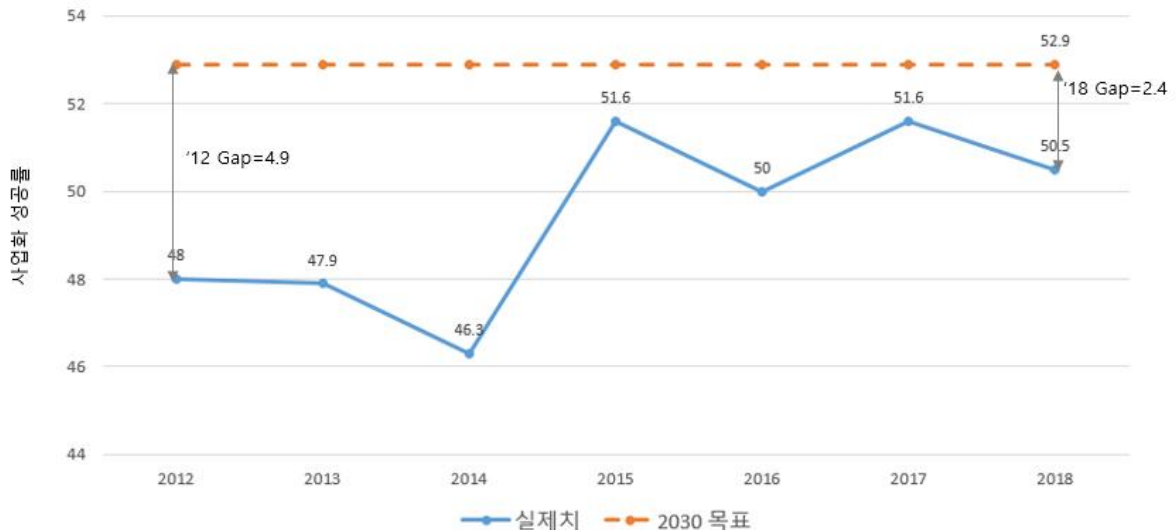
기술 및 산업 발전 분야에서는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이 관리 대상 우선 순위 지표로 선정되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은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내부 계획에 의거하여 2030년까지 57.9%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K-SDGs의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제시된 지표이다.

다음 <그림 4-3>의 연도별 R&D 사업화 성공률은 국회 국정감사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구축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2030 목표치인 52.9%와는 약 4.9%p 차이가 존재하며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도의 실제치와는 약 2.4%p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의 R&D 사업은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18년 기준 90.7%)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전략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안승구, 2019).

사업화 성공률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업화 성공률은 성과 사업화로 인한 매출 또는 직접적인 비용절감의 발생, 제 3자 기술 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정의되는데(산업통상자원부 외, 2015), 이로 인해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판정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아시아경제, 2018.10.26.).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통계는 중소기업벤처부에 국한하여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만약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통계를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닌 범부처 수준에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계산할 경우

2018년 기준 약 50.5%에 달하는 기술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 수준인 25.02%로 추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안승구 외, 2020). 따라서 Gap 분석의 결과 해석에 앞서 향후 기술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정의와 통계 자료의 집계성의 통일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Gap 분석('12-'18)



자료: 국회 국정감사 각 연도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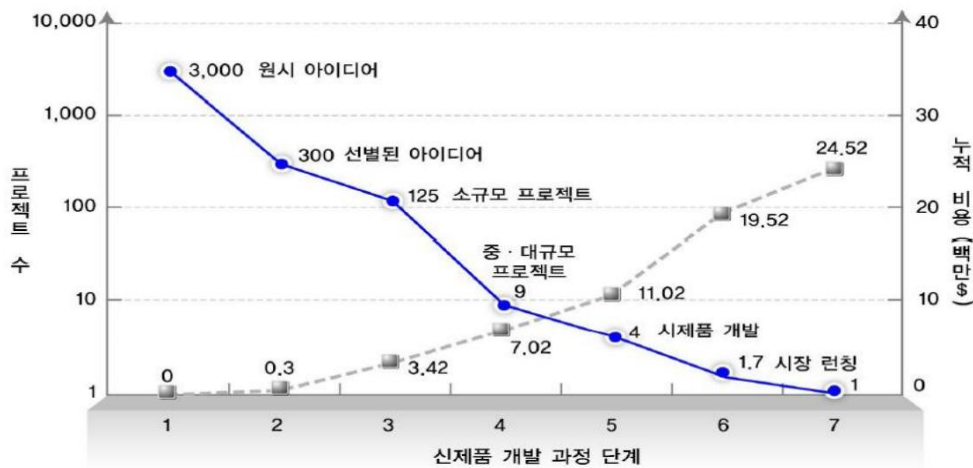
또한 사업화 성공률의 목표치에 있어서 2030년을 기준으로 52.9%로 설정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의 사업화 성공률에 비해 낮은 편이며, 공신력 있는 자료와의 국제 비교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는 미국은 69.3%, 영국 70.7% 수준에 육박하는 사업화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수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 2018년의 실제 달성치가 50.5%라는 점에서 목표 설정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대규모 예산(300억 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R&D 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KOSBIR)를 운영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따른 사업화의 성과가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존재한다(김선우·정효정, 2019).

한편, 사업화 성공률을 기술 개발률의 수준 또는 2030년도의 목표치인 52.9%까지 상승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사업화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를 유형화 하면 크게 시장의 실패와 시스템 실패로 제시할 수 있다(박종복, 2008). 시장의 실패 차원에서는 기술개발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더불어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컨대 Hammerstedt & Black(2008)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업이 1개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간단계별 실패 비용까지 고려할 때 사업화 비용은 연구개발 비용의 약 6.2배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사업화자금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양현봉, 2017). 실제로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개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는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 다른 정책 수단들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구는 규모와 업력을 막론하고 가장 선호되는 지원제도로 제시된 바 있다(양현봉, 2017).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사업화에 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다윈의 바다(Darwinian sea)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의 주요 수단은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사업화 투자, 기술시장 조성 지원 및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안승구 외, 2020).

이와 더불어 시스템 실패는 중소기업보다는 공공연구기관 내에서의 기술 사업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다. 박종복(2008: 19-21)은 공공연구기관 내에서 기술가치 인식의 차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의욕의 부족, 기술이전(거래) 시장의 질적 저하, 공공연구기관 소속직원의 이해상충의 상황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의 결과가 사업화가 되기 어렵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림 4-4〉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위한 소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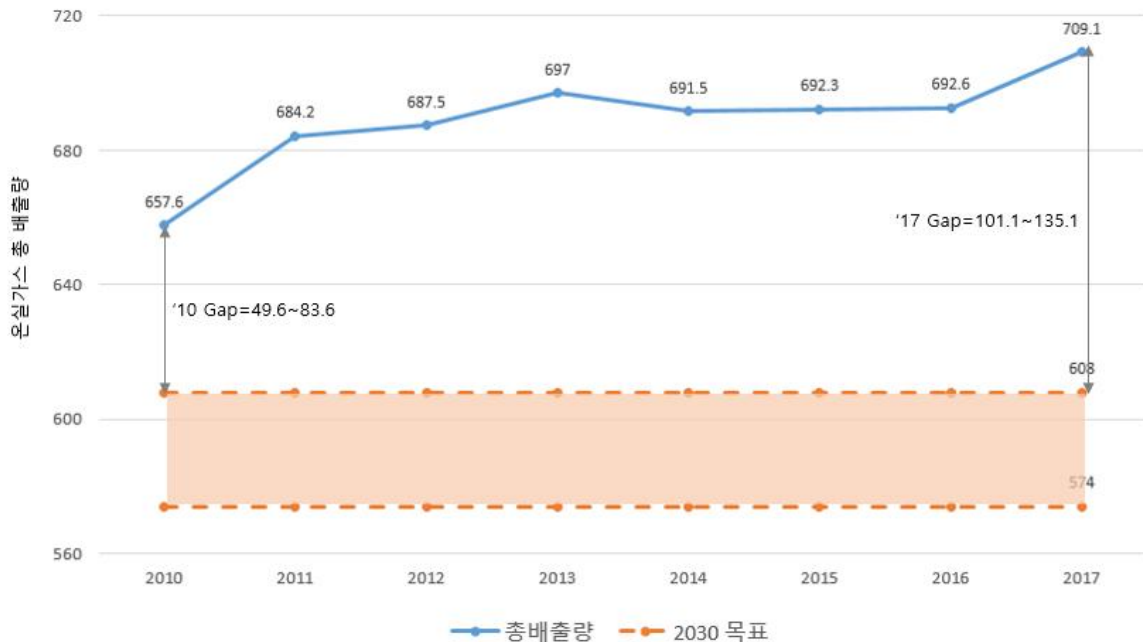
자료: 안승구 외(2020) 재인용; Hammerstedt and Blach(2008).

중요한 문제는 사업화에서 직면하는 인식의 차이와 투입 자원의 차이가 매우 복잡하고 미시적이라는 점이다(손수정 외, 2015). 예컨대, 실험실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자와 응용 및 개발 연구 중심의 연구자간 기술 간의 연계가 매우 어려운데,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와 기업인 간에 더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사업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이나 목적에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이 실용적인 상업적 기술로 전환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화에 투입되는 자본에 있어서도 공공과 민간 투입 간의 차이가 사업화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죽음의 계곡 단계에서 공공부문의 투입 자본이 마중물로 유입되고, 이를 토대로 민간의 자본이 유입되어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사업화 단계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 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기업 요구를 토대로 지식재산 중심의 연계와 혁신 자원들의 통합 플랫폼을 중심의 C&BD(Connect & Business Development) 모델을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4.2.3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관리 대상 우선 순위 지표로 선정되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관계 부처의 내부 검토를 통해 2030년까지 574~608(MtCo₂)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는 K-SDGs의 “지구의 온도상승을 사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제시된 지표이다.

〈그림 4-5〉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Gap 분석('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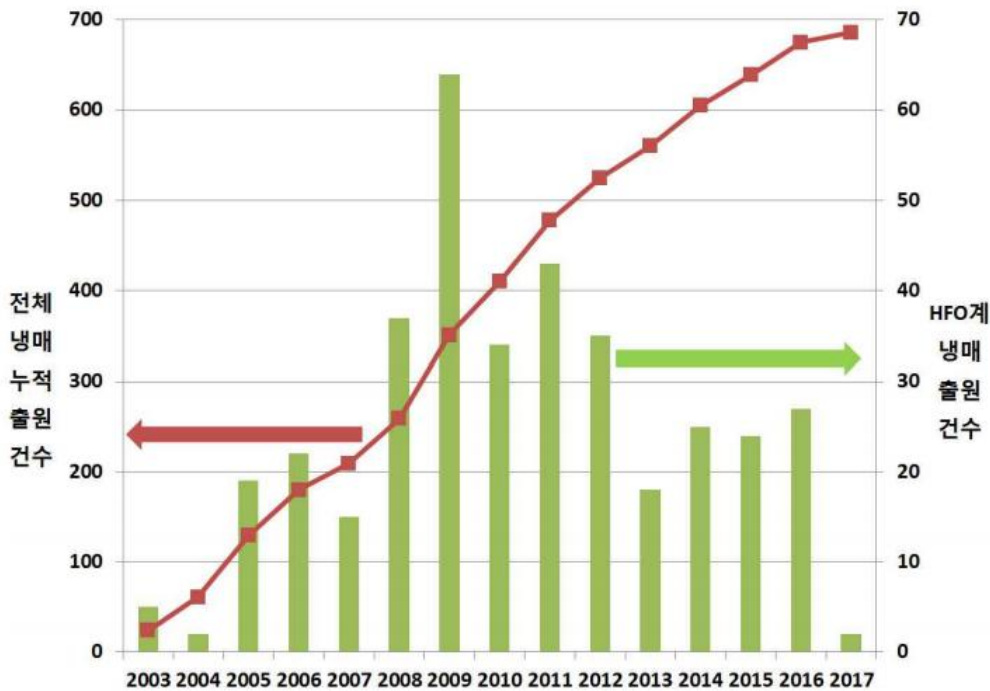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 재구성.

〈그림 4-5〉의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연도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K-SDGs의 2030 목표는 574~608(MtCo₂)이며, 이를 기준으로 Gap을 분석해 보면 2010년에는 약 49.6~83.6(MtCo₂), 2017년에는 약 1.5배~2배에 가까운 101.1~135.1(MtCo₂)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세선의 가장 큰 특징은 2013~2014년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공공 전기 및 열생산, 철강, ODS 대체물질 사용, 화학, 반도체 및 액정 부분에서 비롯된다. 특히 2017년에는 냉방 및 냉장기 생산 증가에 따른 냉매 가스 수입량 증가와 더불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호황에 따른 불소계 가스 구입 증가 영향이 전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약 26%)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환경 규제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과 대국민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로 도입된 불소불화탄소(HFCs)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어컨과 냉장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면서 '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에서 197개 국가가 단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4년에는 HFCs 소비를 동결하고 '45년까지는 '24년 대비 80%까지 감축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특히 환경부는 냉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매 판매량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관리 대상 냉매의 종류 규정 및 냉매 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 냉장용, 산업용 냉매 사용기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 대기 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였다(이종한·강지연, 2019).

〈그림 4-6〉 전체 냉매 누적 출원건수 및 HFO계 냉매 출원건수('03-'17)



자료: 이종한·강지연(2019).

온실 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양한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온실가스 냉매(HFCs)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내 6대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기후변화 유발물질이며 매년 약 8~9%의 증가가 예상된다(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 실제로 미국은 환경 친화적인 냉각제의 사용으로 인해 2014년에만 온실 가스 배출량을 8톤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 온난화 지수)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2015).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4세대 신냉매 등의 보급과 더불어 우수한 친환경 냉매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냉매와 관련한

특히 출원 건수는 총 686건이며, <그림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4세대 신냉매 관련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허청, 2018).

규제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온실 가스를 저감 노력 이외에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탄소중립 프로그램(carbon neutral program) 등에 대한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란 개인 및 기업, 단체,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참여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온실가스(탄소)를 산정하여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한 후 다양한 상쇄 활동 등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 최소화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서 크게 직접감축, 구매감축, 기부감축으로 이루어진다. 직접 감축은 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에 대해 에너지 절약, 나무심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의 방법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이다(정부 24, 2018). 구매 감축은 탄소중립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탄소중립형 구매 상품을 참여자가 구매할 경우 참여자를 대신하여 구매 상품 운영사가 탄소중립 인증 절차를 대행하고 약정한 기부금을 탄소중립 상쇄금 관리기관에 납부하는 참여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기부 감축은 참여자가 직접적인 감축이 어려운 경우 공단이 지정한 상쇄금 관리기관에 탄소 배출량 및 감축 목표량에 해당하는 상쇄감을 납부하여 공단이 상쇄사업을 대신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63개가 '대한민국 기초지방 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및 조례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에너지신문, 2020). 이러한 노력들은 비단 시장 및 중앙 정부의 정책·제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2>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체계

연도	참여건수(건)	참여량 (tCO ₂)	인증건수(건)	인증량 (tCO ₂)
2008	33	4,029	30	3,965
2009	66	6,325	53	3,325
2010	457	13,105	351	9,981
2011	3,891	16,703	1,074	6,093
2012	1,885	28,499	1,347	20,376
2013	9,601	65,868	7,192	42,900
2014	8,580	572,985	4,234	426,022
2015	7,211	1,822,859	5,802	640,243
합 계	31,724	2,530,373	20,083	1,152,905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6).

4.3 사회복지 분야 Gap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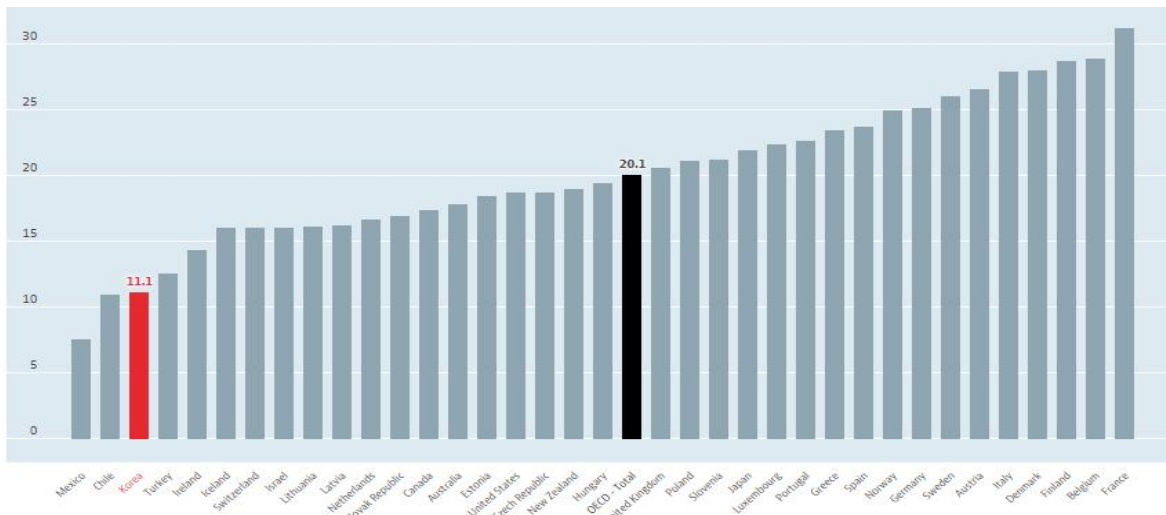
4.3.1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K-SDGs의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강화 목표 관련 성과 지표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는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은 OECD의 연도별 「Society at a Glance」에 제시되어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사회지출은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인 OECD의 사회지출(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⁷⁾의 일환으로 이는 공적(public), 민간(private mandatory and voluntary)의 프로그램 수준의 사회지출을 포함한다.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비중(%)’은 정부부문이 제공하는 모든 사회적 지출 즉, 국가가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출은 현금급여(cash benefits), 현물 및 서비스(direct in-kind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그리고 사회적 목적의 세금감면(tax breaks)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OECD, 2020).

〈그림 4-7〉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총계(aggregated) 비중(2018년 또는 가장 최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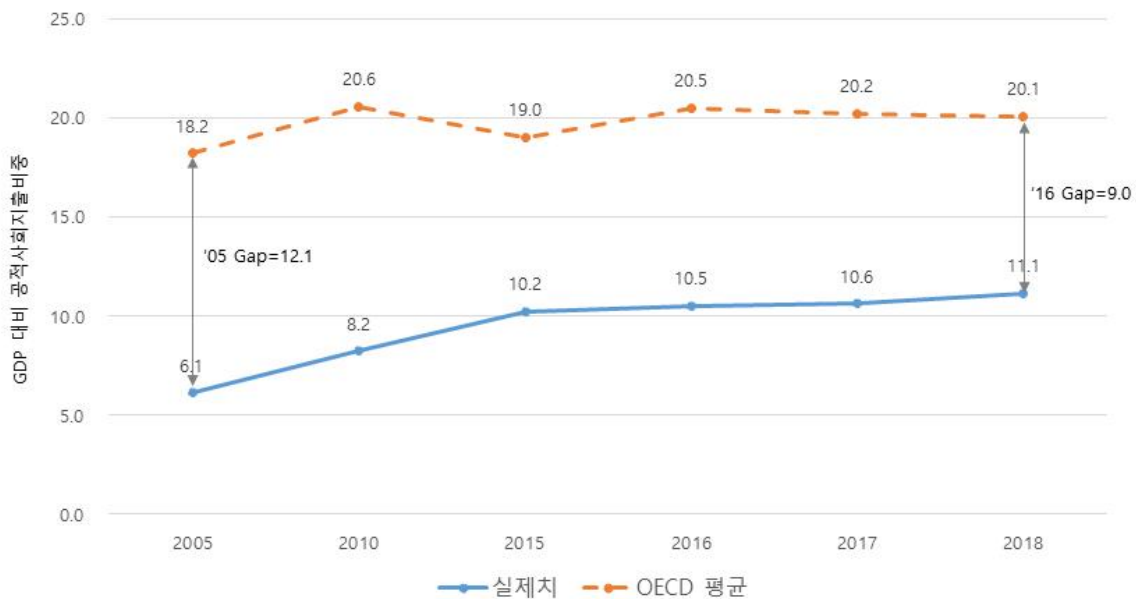
자료: OECD 데이터베이스. Social spending(<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 2020.10.09. 검색)

7)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는 총 사회지출 수준 및 구성비를 분석하고 국가간 비교할 수 있도록 1980-2015/16기간 중 36개 OECD개국의 사회지출을 제시하고 2016-2018년 추세를 추정한다.

현재 K-SDG에서 동 성과 지표의 측정방식에 대해서는 ‘통계 산출방법 개발’로 제시되어 있을 뿐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OECD 성과 지표를 사용가능한 지표의 경우 통상 2030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를 OECD 평균 수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Gap분석에서도 OECD 평균 수준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비중(‘05-‘18)은 2005년 6.1로 OECD 목표치 18.2와 12.1만큼의 차이(Gap)가 존재하였으며 2018년에는 9.0의 차이를 보여 OECD 목표치와의 격차가 감소하였다. 한국의 동 성과 지표 실제치는 2015년까지 가파른 상승추이를 보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도 완만한 상승 추이를 보였다.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OECD 목표치와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8년 기준 한국은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 기준 OECD 36개 국가 중 34위로 여전히 공적 사회지출 비중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4-8>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Gap 분석(‘05-‘18)



자료: OECD 데이터베이스 참고 자료 재구성.

해당 지표에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의 범위는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현금 급여, 재화나 서비스 직접 공급 등)나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순 사회복지지출(Net total social expenditure)’ 개념의 경우 공적 및 사적 부문의 지출을 포함하고 또한 작·간접적 조세효과 및 사회적 목적의 조세감면 효과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보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OECD, 2020). 한편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의 경우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복지지출 성장단계 등을 고려시 OECD 평균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정치경제적 여건과 복지레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준(reference) 지표 모색 역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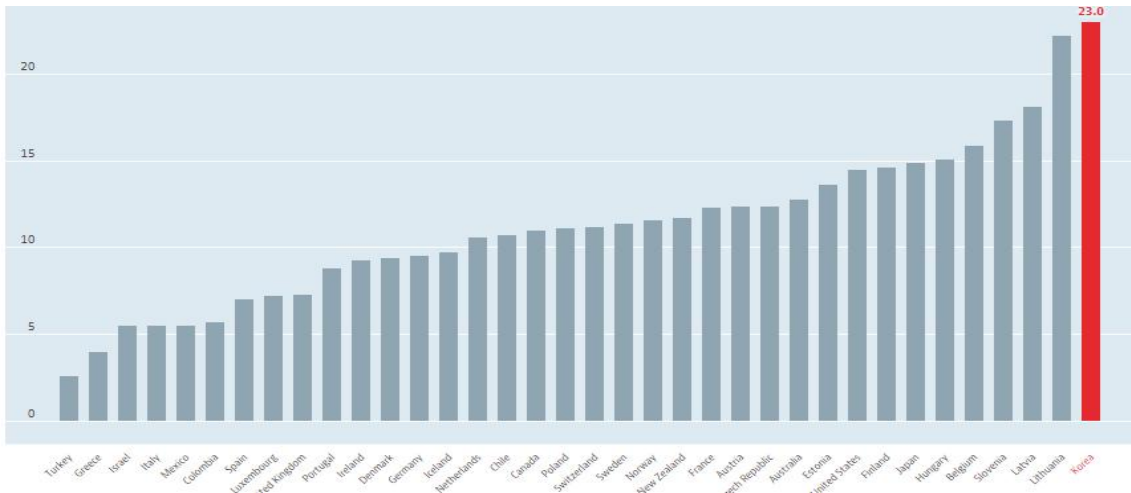
4.3.2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사회복지 분야에서 K-SDGs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 관련 성과 지표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로 분석되었다.

동 지표는 OECD의 연도별 「Health at a Glance」에 제시되어 있으며, 원자료는 WHO Mortality Database로 추출된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전체(total) 및 성별(gender)마다 제시되며 인구 10만명 당 또는 남성(여성) 10만명당 자살 인구 수 비율로 측정되며 국가별 연령 구조에 따른 변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령 표준화하여 측정된다⁹⁾.

최신 자료인 2018년 기준 OECD 37개국의 자살률을 보여주는 <그림 4-9>를 보면 한국은 OECD 전체 국가 중 1위로 가장 높은 자살률(23.0)을 보이고 있다.

<그림 4-9> 전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018년 또는 가장 최근 가능치)



자료: OECD 데이터베이스(<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K-SDGs에서 동 지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로서,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24.3에서 11.9(2018.09. 기준 OECD 국가 ‘인구10만명당 연평균자살률’의 평균을 목표치로 함)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구체적 성과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K-SDGs에서 동 성과 지표의 목표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 Gap분석에서도 OECD 평균 수준을 목표수준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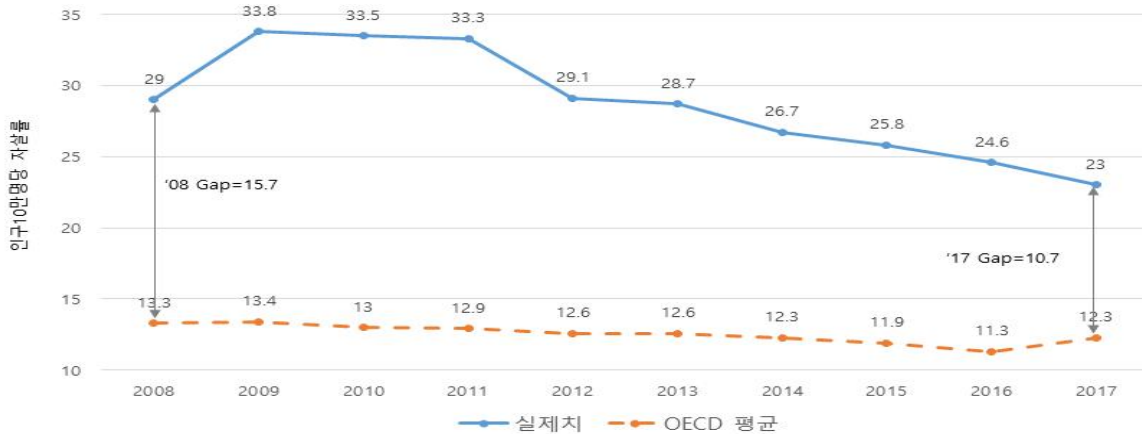
다음 <그림 4-10>의 인구10만명당 자살률은 OECD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구축하였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성과 지표 수치는 OECD 평균수준의 목표치인 29%와는 약 15.7%p 차이가 존재하며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도의 실제치와는 약 10.7%p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10여년간 OECD 평균치와

8) ‘자살(suicide)’은 치명적 결과가 예상됨에도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시도되고 행해진 죽음(Suicide rates are defined as the deaths deliberately initiated and performed by a person in the full knowledge or expectation of its fatal outcome)으로 정의된다(OECD, 2020)

9) OECD 홈페이지 참고(<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검색일 2020.10.06.)

한국의 10만명당 자살률 수치 격차(Gap)는 2010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 2010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여 2017년 기준 10.7%가 된다.

〈그림 4-10〉 인구10만명당 자살률 Gap 분석('08-'17)



자료: OECD 데이터베이스 참고 재구성.

물론 긍정적 추이이지만 한국은 최근 18여년간(2003-2020) OECD 국가 중 인구10만명당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발표자료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09.22.) 『2019년 사망원인통계 중 자살 관련 설명』에 따르면 2019년 사망원인 중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1만 3,799명으로 2018년보다 129명 증가(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6.9명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18년 26.6명)하였다. 따라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3.30)에 근거하여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을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고위험자의 발굴 및 조기 개입 등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다양한 직군(선생님, 저널리스트, 직장인, 보건 의료종사자 등)으로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자살예방(preventing suicide) 정보 안내를 하는 등 보다 세심한 접근을 하고 있다¹⁰⁾. 또한, K-SDGs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목표로 '정신건강 증진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전국민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 실시 유도과 공공의료를 통한 조기 개입 및 예방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지표의 경우 국가별로 스스로 고의적 죽음을 택했는지 결정하는 기준 및 조사방법(포렌식 조사나 사망확인 절차 및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어 수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 일률적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또한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 파악도 중요하며 젊은 연령대 자살의 경우 높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OECD에서 발표하는 잠재적 생명 손실년수(Potential years of life lost) 같은 지

10) 관련 구체적 정보는 WHO 홈페이지(<https://www.who.int/health-topics/suicide/campaign-materials-handouts>) 내 WHO, Suicide prevention Campaign materials: handouts(2019)를 참고하면 된다.

표를 병행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는 각 연령대 발생한 사망자 수와 잔여 생명년수(OECD Health Statistics에서는 70세를 한계 연령으로 봄)를 곱하여 더하는 방식이다(OECD, 2020). 무엇보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고위험자 발굴 및 조기 개입을 위해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민관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와 같이 자살률이 높은 직군을 발굴하고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자살예방(preventing suicide)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외 지역사회 단위 민간 복지 및 의료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살 위험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개입을 통한 자살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 국민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 실시 유도, 공공의료를 통한 조기 개입 및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좀 더 포괄적 접근을 위해 자살률과 연관성이 있고 OECD 국가들도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4.3.3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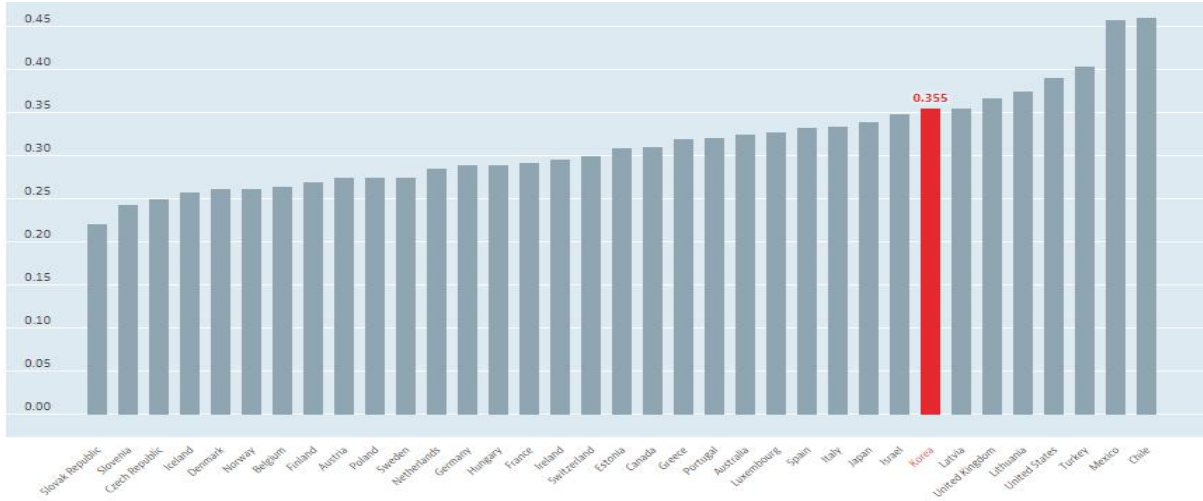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에서 K-SDGs의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관련 성과 지표 가운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소득격차비율”로 분석되었다. 한국행정연구원(2019)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3%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갈등의 원인(1순위)로 빈부격차를 들고 있으며 개인집단간 상호이해부족(27.6%)-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2.4%)에 이어 상위 3순위 요인이다.

소득격차와 관련 국제 지표로 OECD의 연도별「Society at a Glance(OECD, 2020)」에 제시된 소득불평등 지수를 들 수 있다. 개인들간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among individuals)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수 중 하나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r index)’를 사용하고자 한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불평등 측정지표로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국가 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간의 소득 분배를 비교하고, 국가 내에서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상을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다(OECD, 2020). 이 때, ‘소득’은 특정연도의 가처분가계소득으로 근로소득(earnings), 자영업(self-employment), 자본소득(capital income)과 공적이전지출(public cash transfers)로 구성되고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은 공제한 값이다.

〈그림 4-11〉은 국가별 2018년 기준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한 것으로 한국은 OECD 전체 국가(35개) 중 8위(0.355)로 소득불평등도, 즉 빈부 소득격차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1〉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2018년 또는 최신 이용가능 자료)



자료: OECD 데이터베이스(<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indicator-chart>, 검색일 2020.10.0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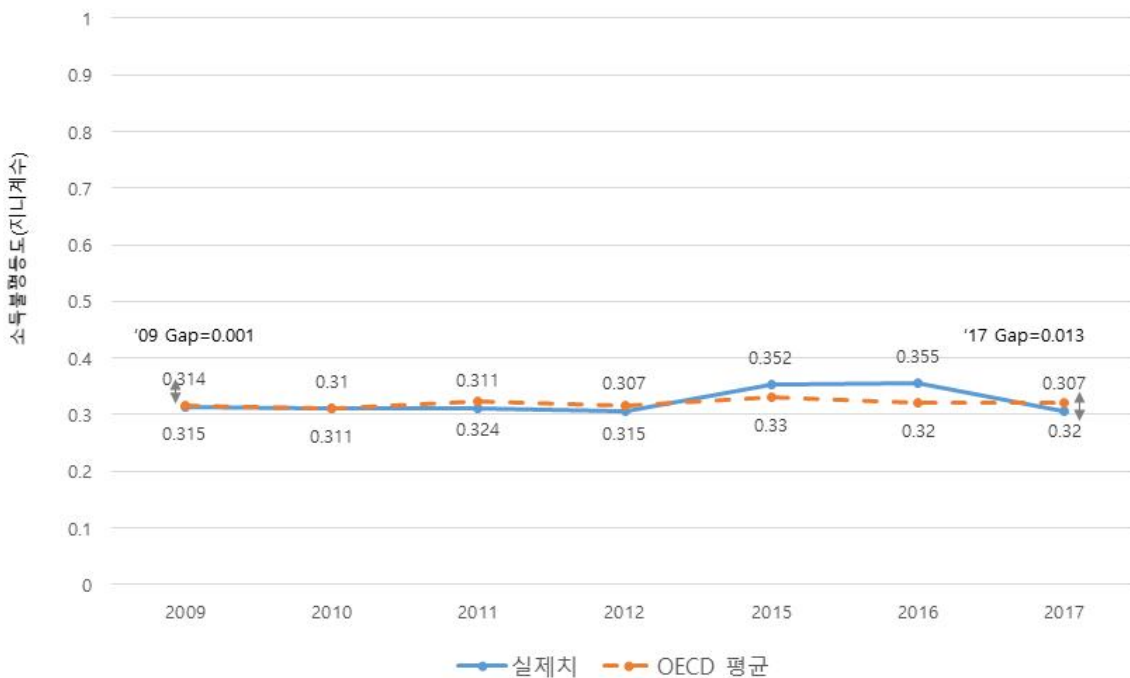
다만, 소득불평등도(income inequality)는 지니계수 외에도 OECD에서는 5개 지표를 활용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안적 4개 지표로 S80/S20(상위20% 평균소득/하위20% 평균소득), P90/P10(소득분위 기준 9분위 소득 상한값/1분위 소득 상한값), P90/P5(소득분위 기준 9분위 소득 상한값/중위소득), P50/P10(중위소득/1분위 소득 상한값), 팔마비율(Palma ratio)(가처분 소득 기준 상위10% 소득점유율/하위 40% 소득점유율) 등이 있다. 한편, 소득격차 외에도 빈곤선 이하에 놓인 실질적 빈곤계층의 수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OECD에서 활용하는 빈곤율(poverty rate)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총 인구의 중위(median) 가계소득의 1/2로 간주되는 빈곤선(poverty line) 이하 소득수준의 일정(given) 연령집단 인구 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 뿐 아니라 연령집단별(child poverty, 0-17세; working-age poverty, 18-64세, elderly poverty, 66세 이상)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 빈곤율을 가진 국가일지라도 상대적 빈곤층의 소득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빈곤갭(poverty gap) 지수를 통해 빈곤율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수도 있다. 빈곤갭은 빈곤선(총 인구의 중위 가계소득의 1/2선) 이하의 빈곤층 평균소득 비율을 의미한다.

K-SDGs에서 소득격차비율의 경우 36.8(2017년 기준)로부터 31(2030년 목표, 2015년 OECD 평균)을 달성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지표의 산출근거나 원천이 불명확하여¹¹⁾ 동 GAP 분석에서는 OECD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로 측정)를 달성목표 수준으로 본다. 소득격차율

11) K-SDGs의 (G10) 불평등 해소의 세부목표 5로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 소득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를 제시하고 있고 관련 신규 지표로 소득격차비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지표의 출처 및 근거가 불명확하다.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팔마비율(=상위10% 소득점유율/하위 40% 소득점유율)은 가처분 소득이 가장 높은 10%가 받는 모든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 가장 낮은 40%가 받는 모든 소득의 몫으로 나눈 값으로 동 지표와의 연계성이 가장 높아보인다. 그러나 실제 한국은 2017년 기준 1.44로 동 비율의 측정치 값과도 거리가 있다.

Gap분석에서는 지니계수 기준 OECD 평균 수준을 한국의 달성목표 수준으로 사용하였으며 다음 <그림 4-12>는 OECD 평균치와 한국의 성과 달성치를 비교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차이(Gap)를 보여준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치 0.315와 약 0.001 근소한 차이가 존재하며 2015년 이전까지는 OECD 평균수치 대비 한국의 지니계수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보통수준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2016년에는 OECD 목표치를 하회하였고, 다시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도 OECD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며 실제치와 차이(Gap)은 약 0.013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2> 소득격차비율(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 기준) Gap 분석('09-'17)



4.4 정주여건 분야 Gap 분석

4.4.1 사회재난 사망인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¹²⁾,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이며,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동 중장기 계획에서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17년 기준 2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과 주요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으로, 재난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주변 위험요인 발굴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풍수해 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둘째,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및 정수장 현대화로 국민 생활안전을 제고한다. 더불어 1인 1안전 수칙 지키기,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추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셋째,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이를 위해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 및 해상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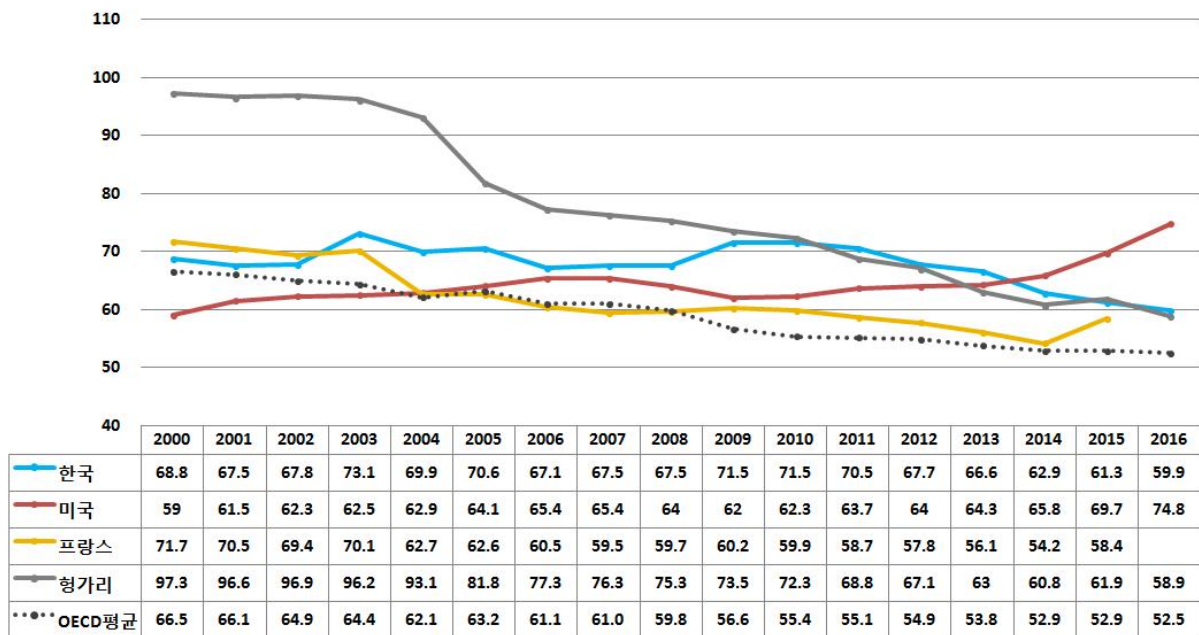
넷째,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 미래·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재난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 기

1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24년) 수립-” 2019년 8월 9일.

술개발, 재난 회복력(resilience) 확보에 집중하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또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풍수해 대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한국의 재난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10만명당 60여명 수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00년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이나,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된다. OECD 국가 중 프랑스나 헝가리 등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프랑스는 2002년, 헝가리는 2010년 이후 한국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동 지표에서 정의하는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각 국가별 ‘재난 및 안전사고(외인사+자살, external causes of mortality)+결핵+에이즈’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조사망률(Deaths per 100,000 population-crude rates)을 적용한 것이다.

〈그림 4-13〉 OECD 주요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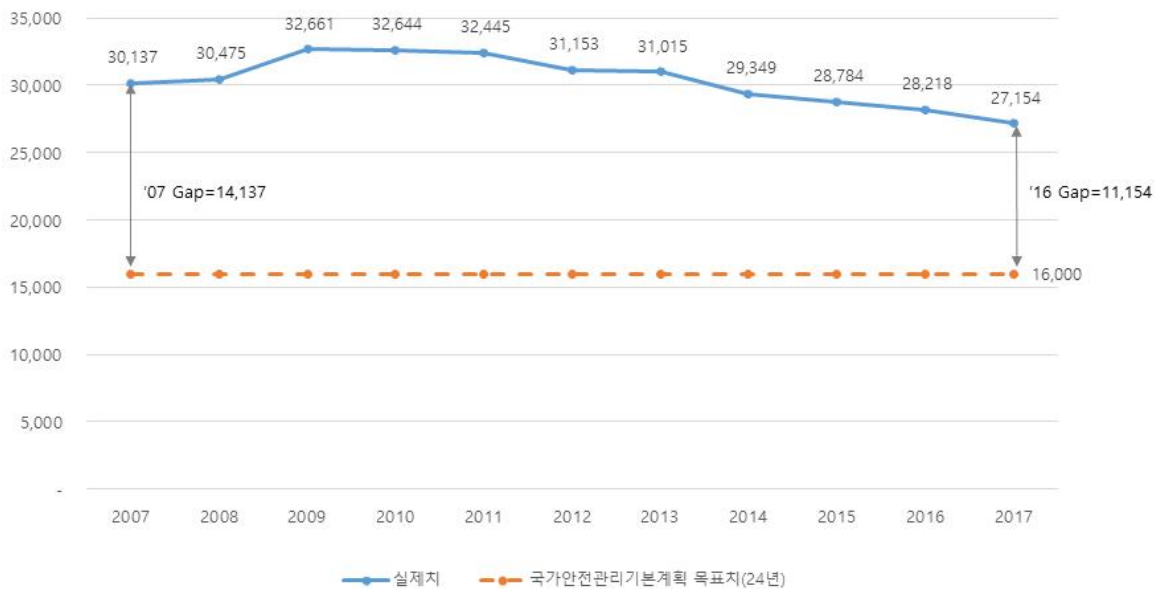
자료: 중앙안전관리위원회(2019); OECD Health Status(2019).

하지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기준은 K-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 지표인 사회재난 사망인구(인구 10만명당)의 정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정부 부처 간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OECD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기준은 사망의 외인, 자살, 결핵, 에이즈를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안전기본계획에서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위에 있어서도 OECD는 10만명당 사망자수로 인구 규모를 통제된 단위이나, 국가안전기본계획은 사망자수 자체를 지표로 활용하여 인구규모의 변화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K-SDGs는 사회재난 사망자수로 정의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질병보다는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의 차이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어렵게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의 성과 지표의 Gap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재난안전 사망자수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이다. 여기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재난안전 사망자수는 3만명 수준에서 증가하여 32,661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민안전기본계획에서는 2017년의 27,154의 40% 수준인 16,000명까지 사망자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목표치는 16,000명으로 하여 Gap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Gap은 3000명 줄어들었는데, 2024년까지 16,000명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향후 10년 간 기존의 추세를 따른다면 24,000명 정도가 적절한 목표치일 것으로 보이며, 16,000명 수준을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4〉 재난안전 사망자수의 Gap 분석('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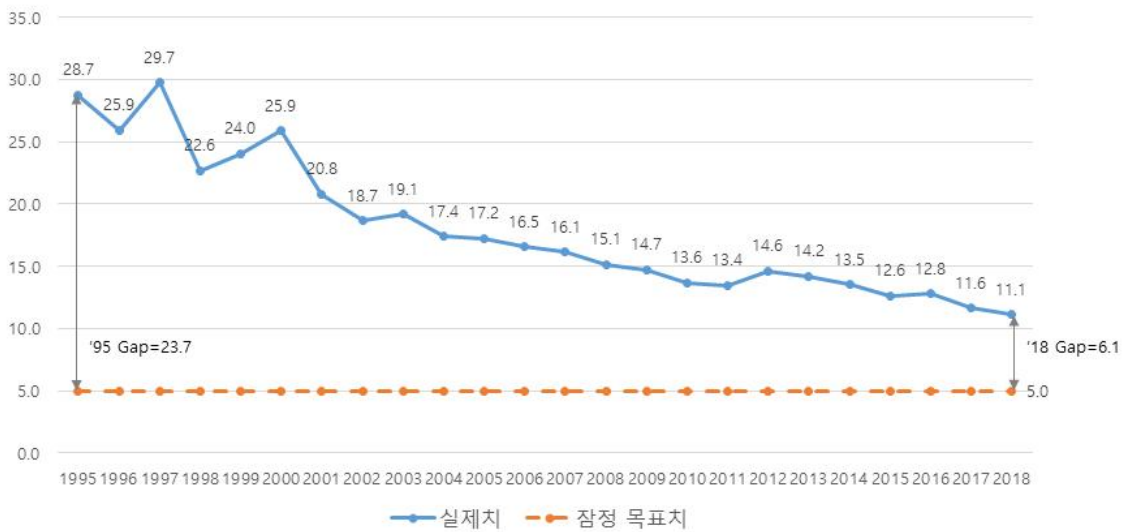
주: 재난안전 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각 연도.

다음으로, K-SDGs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사회재난 사망자수)를 살펴보았다. 단위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로 인구규모를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통계는 매년 화재, 도로교통, 산불, 붕괴, 폭발 등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이며¹³⁾, 각 자료는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을 취합한 자료이다. 통계자료는 1995년부터 존재하며, 인구 10만명당 28.7명 수준이었다가, 1997년 29.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현재 11.1명이 되었다. 앞서 살

13) 화재, 산불,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통계데이터를 제공하여 재난관리정책 수립과 연구기관 및 학계의 재난관련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토록하여 급격한 재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재난관리 역량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퍼본 재난안전 사망자수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15명 수준에서 2018년 11명 수준으로 10년 간 4명이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준으로 향후 10년 간 줄인다면 7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SDGs에서는 특정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감소를 추진한다고만 하고 있어, 기존의 추세를 고려한 상황에서 도전적인 목표치로 5명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4-15〉 사고발생 사망자수의 Gap 분석('95-'18)



주: 사고 유형은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 폭발, 해양, 가스, 유도선, 환경오염, 공단내시설, 광산, 전기(감전),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붕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로 분류.
 자료: 행정안전부「재난연감」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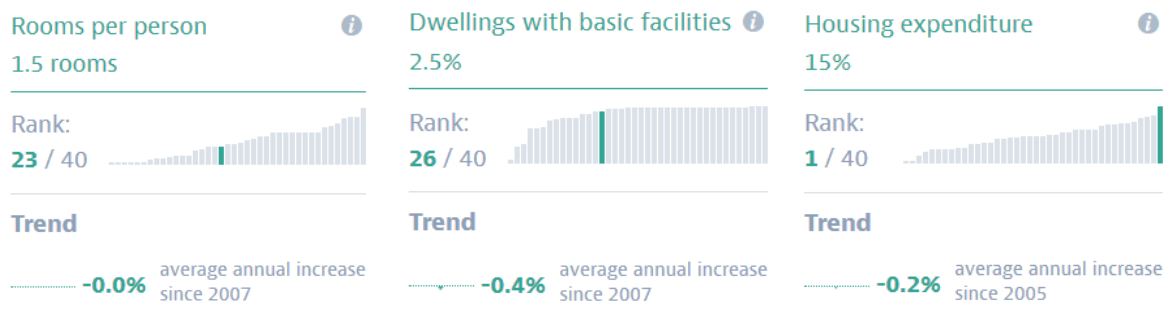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재난 발생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재난연감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산불, 해양선박사고, 사업장인적사고, 가축질병, 전력, 유해화학유출, 철도사고, 지하철사고, 해양오염, 건물붕괴, 보건의료, 감염병, 육상화물운송 사고를 포함하는 사회재난 및 안전분야의 종합통계 자료이다. 정주여건 분야에서 안전이 가지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COVID-19, 유해화학물질, 대형화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K-SDGs에서는 사회재난 사망자수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발생건수와 재난피해액도 함께 고려하여 전반적인 사회의 안전지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4.4.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만족스러운 주거 조건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주택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생활과 개인 공간이 있는 수면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주택 비용은 가계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임대료, 가스, 전기, 수도, 가구 또는 수리와 같은 요소를 더할 때까지 많은 개인 및 가족에게 가장 큰 단일 지출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가구는 평균적으로 조정된 총 가처분 소득의 15%를 주택에 지출하는데, 이는 OECD의 평균이 20%라는 점에서 한국의 지출 수준은 가장 낮은 편이다. 주택 비용 외에도 1인당 평균 공유 방 수 및 가구가 기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생활 조건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주지의 방 수를 거주하는 사람 수로 나눈 값은 거주자가 혼잡 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과밀 주택은 신체 및 정신 건강, 타인과의 관계 및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밀집된 생활 조건은 종종 부적절한 물과 하수 공급의 신호이다. 한국의 평균 가정은 1인당 1.5실로 OECD 평균 1인당 1.8실보다 적다. 기초 시설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거의 97.5%가 실내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개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OECD 평균인 95.6%보다 많은 편이다.

〈그림 4-16〉 OECD Better Life Index의 Housing 관련 주요 지표의 우리나라 현황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Housing.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housing/>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¹⁴⁾.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 수를 제시하고, 침실·부엌·화장실·현관·수납공간 등을 합한 총 주거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2㎡(3.6평), 4인 가구의 경우 37㎡ (11.2평)이다¹⁵⁾. 시설기준은 침실·부엌·화장실 등 주거 및 부대시설 설치기준으로서, 침실은 기

14)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년 5월 27일 시행)

15) 1인 가구: 총 주거면적 14㎡의 부엌+방 1개(거실 포함)
 2인 가구: 총 주거면적 26㎡의 식사실 및 부엌+방 1개
 3인 가구: 총 주거면적 36㎡의 식사실 및 부엌+방 2개
 4인 가구: 총 주거면적 43㎡의 식사실 및 부엌+방 3개
 5인 가구: 총 주거면적 46㎡의 식사실 및 부엌+방 3개

본적으로 부부 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를 초과한 자녀의 침실을 부부침실과 분리하였으며,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의 침실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용부엌 및 화장실을 확보하되, 부엌에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였다.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는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는 한편,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만가구의 비율의 Gap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6년 16.6%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5.4%를 달성한 뒤, 2018년 현재 5.9%로 약간 증가한 상태이다. K-SDGs는 2030년까지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06년 12.0%p 차이에서 2018년 현재 1.3%p 수준으로 gap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저주거기준 미만가구 지표는 다른 지표와 같이 지속적인 감소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2014년 이래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의 문제, 고령화 및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1%p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기존의 정책개입 노력에 비해 더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Gap 분석('06-'18)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 조사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상업시설/의료시설/공공기관/문화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접근용이성(각 문항),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주차시설 이용편이성, 주변도로의 보행안전, 교육환경(학교, 학원, 미취학 아동 시설),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주변 소음, 청소 및 쓰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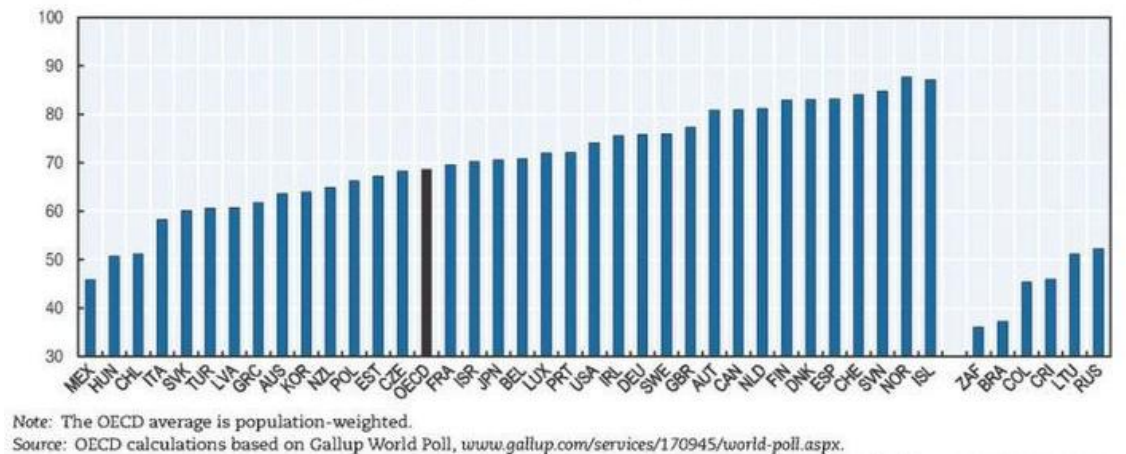
6인 가구: 총 주거면적 55m²의 식사실 및 부엌+방 4개

기 처리상태,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 등을 4점 척도로 측정한 뒤, 이를 종합한 것이다. 이는 물리적 정주여건을 종합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 지표의 평균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3 5대 범죄 검거율

정치사회적 정주여건으로 K-SDGs의 인권, 정의, 평화를 포함하였으며, 계층화 분석의 결과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5대 범죄 검거율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국가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흔히 인용되는 통계자료로 World Bank Poll에서 수행한 ‘밤 거리를 혼자 거닐기 안전한가’를 설문결과가 활용되곤 한다.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 60점대 초반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동 설문은 국가 전체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인식까지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안전 및 치안 정책의 결과라고 볼 때 살펴볼 가치가 있는 지표라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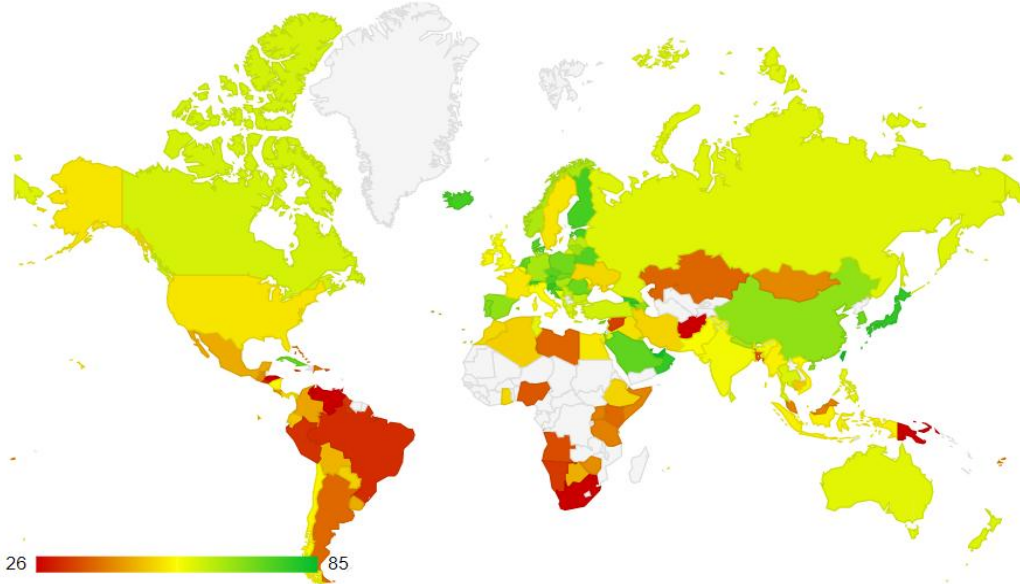
〈그림 4-18〉 밤거리를 혼자 거닐기 안전한가 지수의 국제비교



자료: OECD iLibrary. Feeling of safety when walking alone at night.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feelings-of-safety-when-walking-alone-at-night-oecd-average_how_life-2017-graph196-en

한 국가가 안전한 사회인지를 살펴볼 때 활용되는 또 다른 지표로 NUMBEO에서 제공하는 치안지수가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치안지수는 70점대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선진국과 카타르, 일본 등이 가장 치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영국 등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조사 역시 경성적인 자료에 의한 객관적 조사라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여행자에 대한 주관적 설문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림 4-19〉 국가별 치안지수(safety index) 현황



자료: NUMBEO. https://www.numbeo.com/crime/rankings_by_country.jsp?title=2020&displayColumn=1

국내에서는 경찰청에서 5대 강력범죄(강도, 살인, 강간, 절도, 폭력)의 현황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고길곤(2019)에 따르면, 이러한 강력범죄 통계의 경우도 각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국가 간 비교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아래 〈표 4-3〉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강력범죄는 50만 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40만 건 정도가 검거되어 약 80% 수준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다. 범죄의 종별로는 절도와 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살인과 강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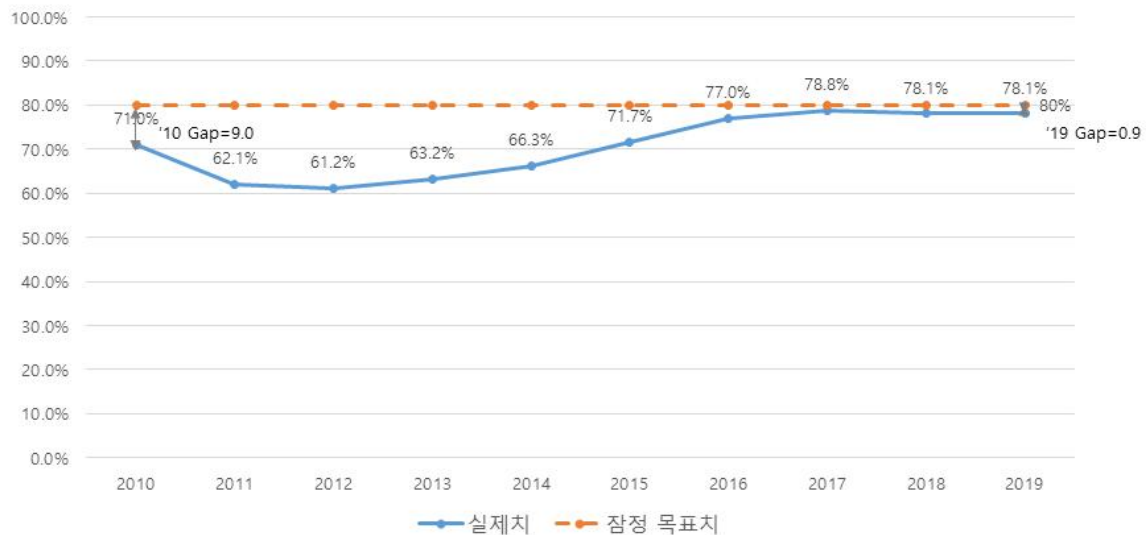
〈표 4-3〉 경찰청 통계기준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발생	574,021	535,898	501,978	488,288	499,010
	검거	411,328	412,462	395,798	381,385	389,964
살인	발생	919	906	818	791	775
	검거	899	902	820	777	776
강도	발생	1,445	1,149	965	818	798
	검거	1,456	1,168	975	818	801
강간·강제추행	발생	21,280	22,193	24,106	23,467	23,531
	검거	20,519	21,451	23,284	22,633	22,680
절도	발생	245,121	202,874	183,565	176,613	186,649
	검거	126,703	118,476	113,625	106,535	113,427
폭력	발생	305,256	308,776	292,524	286,599	287,257
	검거	261,751	270,465	257,094	250,622	252,280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2.jsp>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의 최근 10년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71.8%에서 시작하여, 2012년 61.2%까지 낮아졌다가 2016년 이후 2010년의 수준을 회복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거율이 100%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80% 수준의 검거율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K-SDGs에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목표로 정하고 있으나, 검거율과 같은 지표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고, 1%p 증가를 위한 노력의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80% 수준을 목표로 제시한다. 그 결과 최근 5년 간 거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으며, 향후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치안과 같은 기술지향적 접근과 사회전반에 대한 갈등감소 등 거시적 범죄예방을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0〉 5대 강력범죄의 Gap 분석('10-'19)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2.jsp>

4.5 소결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집행 실태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분야별 우선 순위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에 대한 목표치와 실제치 간의 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세 지표 모두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목표치에 비해 실제 달성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R&D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 공식적인 지표 및 산식이 부재하여 지표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통계 또는 주요 세계 공용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R&D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 R&D에 포함되는 활동 등이 광범위하므로 공공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의 기술이전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지표는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률이 계산되며 정부 승인통계이기 때문에 공신력과 관리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기반으로 한 성과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집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역시 우선순위로 도출된 지표의 추세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핵심 지표들은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득불평등도나 자살률과 같은 지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지표들의 목표치와 실제 달성치에 대한 수준 차이는 주요 중장기 계획의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 분야에 Gap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OECD 평균 이외에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잠재적 생명 손실년수, 연령대별 사망자 수, 잔여 생명년수, 소득 분위별 비율, 실질적 빈곤계층의 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 등 다양한 지표와 지수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 불평등도의 경우 단일 지표로만 달성 수준을 점검할 경우 사회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의 집행 수준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사회재난 사망자 수에 대한 국내외 산식의 차이가 존재하여 지표 관리의 통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나머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과 5대 강력 범죄 검거율의 경우 목표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 대비 효율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주여건 분야의 분석결과 도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의 사회재난 발생건수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재난 발생건수는 분석결과 도출된 사회재난 사망자수를 확대한 지표이며, 주거환경 만족도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주거환경을 종합한 지표로서 분석결과 도출된 5대 범죄 검거율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의 일반적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지표와 중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 지표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지표로 주거환경 만족도를 고려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연구 결과의 요약

5.2 정책 제언

5.3 연구의 한계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 계획들을 K-SDGs의 성과 지표와 연계하고, 선별된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도출된 지표를 대상으로 Gap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의 목표 달성 수준을 분석하고, Gap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주요 중장기 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인적 자원 개발, 기술 및 산업발전, 기후 변화 대응 등 세 가지 항목이 도출되었다. 각 항목들과 관련하여 K-SDGs의 성과 지표 9개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 결과 인적 자원 개발에서는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기술 및 산업 발전 부분에서는 R&D 사업화 성공률, 기후변화 대응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요 관리 대상 지표로 선정되었다. 세 지표 모두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목표치에 비해 실제 달성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R&D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 공식적인 지표 및 산식이 부재하여 지표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10개 중장기 계획의 전략체계도 등을 검토한 결과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등 세 가지 K-SDGs 목표 분야와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동 세 가지 정책목표 분야와 관련한 K-SDGs의 성과 지표는 총 9개가 도출되었으며 전문가 대상 AHP 분석 결과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분야에서는 인구10만명당 자살률(%),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분야에서는 소득격차비율(소득불평등 지수 지니계수로 대체)이 주요 관리 대상 지표로 선정되었다. 우선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의 경우 분석대상 기간('05-'18) 중 꾸준히 상승추이를 보이나 여전히 2018년 기준 OECD 36개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 향후 복지국가에 대한 수요증대와 저 성장시대 소득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공적 사회지출 비중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인구10만명당 자살률 지표의 경우 분석대상('08-'17) 기간 동안 OECD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OECD 전체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어 WHO의 자살예방을 위한 직군별 맞춤형 예방조치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병행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대표하는 지니계수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 2016년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7년 이후 OECD 평균치를 다시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주요 중장기 계획과 K-SDGs의 지표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포용적인 주거환경, 인권, 정의, 평화가 주요 목표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각각 9개의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계층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재난 사망자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그리고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선정되었다. 이들 주요 성과 지표에 대한 Gap 분석결과, 사회재난 사망자수의 경우, 지표의 정의에 대해 부처 간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등의 자료를 각각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SDGs의 사회재난 사망자수와 국가 안전기본계획의 재난안전 사망자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일치성 확보도 요구된다.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 간의 추이를 고려할 때,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목표치 설정의 현실화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과 5대 강력범죄 검거율 지표의 경우, 모두 최근 목표치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후 1%p를 개선하기 위해 들어가는 한계 노력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5.2 정책 제안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각 계획이 달성해야 하는 핵심 성과 지표(KPI)를 2-3개 정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주요 중장기 계획과 관련된 K-SDGs 성과 지표를 선별하여 연계하였으나, 각 계획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 있는 성과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표를 연도별로 측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 지표는 중장기 계획의 목적 달성 여부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는 측면에서 각 계획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목표치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은 차치하고서라도, 향후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성과 지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각 중장기 계획의 성과 목표를 기간별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장기 계획의 목표들이 앞서 언급한 핵심 성과 지표로 측정될 경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목표를 적절하게 수정 및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각 중장기 계획에 투입되는 다양한 예산을 포함한 자원들이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있어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국무조정실, 한국정책학회, 2015). 따라서 분야별로 계획의 성격에 맞추어 단기간에 발생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와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병행하여 계획의 달성 수준을 적절하게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 계획을 통폐합하고, 성과 지표를 간소화하여 목표 지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주관부처가 모호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집행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수립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통폐합하고, 정책목표를 간소화하여 명확하고 내실있는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합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성과 지표 달성의 유인을 높이고 체계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성과 지표는 적절성, 인과성, 구체성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춰 각 계획들의 달성 목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일부 K-SDGs의 성과 지표의 경우 역시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commercialization) 성공률은 공식적인 지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표의 출처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도 K-SDGs 목표 연계 성과 지표로 구체적 성과 지표를 제시한 경우인 ‘인구10만명당 자살률’이나 ‘소득격차율’ 지표의 경우 국제기준(OECD)과 수치가 상이하며 측정산식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오히려 OECD 국제지표를 활용가능한 ‘공적사회지출 비중’의 경우에 K-SDGs에서는 산출방법 개발로만 적시되어 있을 뿐 근거와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지표의 정확한 산식 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사업(program)조차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측정 자체가 매우 난해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성과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K-SDGs의 성과 지표 체계 역시 점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K-SDGs와 같은 형태로 범부처 수준의 정책목표와 성과 지표를 도입하여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정책문제는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여러 부처가 함께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성과목표나 방향은 동일하나 다수의 정책수단이 투입되거나, 목표설정을 다양하게 하여 정책수행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오히려 여러 부처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 간 상충이 나타나거나 정책 수단 간 갈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요원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정주여건 분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여 설정한 성과 지표인 사회재난 사망자수와 재난안전 사망자수가 비슷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 지표의 정의가 달라 효과적인 정책혼합(policy mix)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다부처가 함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괄적이면서도 서로 상충되지 않는 지표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3 연구의 한계

상기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계획 가운데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분야에 한정하여 각 분야별 중점 계획을 K-SDGs의 성과 지표와 연계하였다. 그러나 각 계획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성과 목표와 K-SDGs의 성과 지표 간의 논리적 연계가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시사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첫 번째 한계점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K-SDGs의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 자체의 적절성 분석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바람직한 성과 지표의 조건으로서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적시성(SMART)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각 성과 지표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분야별로 AHP 분석을 통해 수행된 우선 순위 지표만을 대상으로 Gap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야별로 모든 지표를 대상으로 Gap 분석을 수행할 경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이 더 많이 제시될 수 있으나, 유형별로 중복되는 개선 방향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보완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부의 주요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서 K-SDGs의 성과 지표와 연계하여 중장기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 및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점이 보완될 경우, 향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각 계획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 계획 등이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만 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고길곤·김지원·정혜진·송효진. 2019. 정부 중장기 계획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정책,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2018.12.28.일 보도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9.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 국무조정실·한국정책학회. 2015. 성과 지표 개선방안 연구.
- 기획재정부. 2016.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보고서.
- 김기형. 2018. 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 평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03-218.
- 김동건·윤영진·박정수·이원희. 2006. 각 부처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계 방안. 기획예산처.
- 김선우·정효정. 2019.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 STEPI Insight. 231호.
- 김태영·송성수·김기룡. 2017. 인재개발분야의 사회적 가치 정립 및 확산 방안 연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문해주·강현규·유지연. 2010.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박종복. 2008.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산업연구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9.22. 2019년 사망원인통계 중 자살 관련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5. 성과활용현황조사 입력메뉴얼.
- 서영인·최상덕·김지하·문보은·김병주·신재영. 2019.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손수정·임채윤·이정찬·이아정. 201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안승구. 2019. 정부의 중소기업 R&D 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KISTEP Issue Paper. 통권 274호.
- 안승구·박종복·나영식. 2020.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KISTEP Issue Paper. 통권 285호.
- 양현봉. 2017.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실태와 정책과제. 중소기업금융연구.
- 에너지관리공단. 2016.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 이상훈. 2014.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이종한·강지연. 2019. 국내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규제 개정 동향.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현출판사.
-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http://www.spckorea.or.kr>.
- 지속가능발전 포털. <http://www.ncsd.go.kr>
- 최현선. 2018.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제도 혁신, 『공공기관이슈포커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 4-9.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 한민규 외. 2018. 2018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조사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허성윤·조만석·이용길. 2016.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1(1): 29-69.
- 환경부. 201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 황용수. 2000.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의 수립현황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KISTEP. 2019. 2018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비교. KISTEP 통계 브리프 2019년 제 22호.

2 웹사이트

OECD 홈페이지 Database. <https://www.oecd.org>

OECD. 2020. Society at a Glance.

OECD. 2020. Health at a Glance.

WHO 홈페이지 Database. <https://www.who.int>



부록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부록 1]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AHP 설문지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목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설문지

No	ID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중장기 계획 집행실태 및 성과 평가체계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입니다. 본 설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목표와 성과 지표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과학기술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목표 및 지표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목표 및 지표의 우선순위를 AHP 설문방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합니다. 설문결과는 분석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각 설문문항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귀하의 전문성과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AHP 설문의 응답일관성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통계학적 설문문항은 통계 처리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5일~8월 12일
주관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자 : 정혜진 교수 (부산대학교)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AHP 설문문항의 구성과 응답방법

※ 기재요령

1. 아래의 각 행의 왼쪽과 오른쪽에 제시된 2개의 평가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2. 첫번째 행에서 ‘A.과학기술’이 ‘B.사회복지’보다 "매우 중요"하면 아래와 같이 왼쪽의 ⑦에 표시합니다.
3. 두번째 행에서 왼쪽의 ‘A.과학기술’이 오른쪽의 ‘C.정주여건’보다 "약간중요"하다면, 왼쪽의 ③에 표시합니다.
4. 세번째 행에서, 오른쪽의 ‘C.정주여건’가 왼쪽의 ‘B.사회복지’보다 “중요”하다면, 오른쪽의 ⑤에 표시합니다.
5. 만약, 두 평가항목의 중요성이 “같다”면, ①에 표시합니다.

평가항목 (L)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R)								
A.과학기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사회복지
A.과학기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정주여건
B.사회복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정주여건

※ 응답시 주의사항

1.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유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항별로 우선 평가항목의 순서를 먼저 정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습니다.
2. 응답의 일관성이란 만일 A가 B 보다 중요하고, B가 C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을 경우, 당연히 A는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1.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목표 및 지표의 우선순위 선정

본 설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기반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목표와 중점관리지표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1-1.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인적자원개발 :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의 증대
- B. 기술 및 산업발전 :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 기술과 산업의 혁신 및 발전
- C. 기후변화 대응 :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인적자원개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기술 및 산업발전
A. 인적자원개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기후변화 대응
B. 기술 및 산업발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기후변화 대응

1-2. '인적자원개발' 목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의 학력소지자 수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 b.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
- c.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부담율 : GDP에서 차지하는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비율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고등교육 이수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a. 고등학교 이수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부담율
b.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부담율

1-3. '기술 및 산업발전' 목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GDP 대비 연구 개발비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b. 자원 생산성 : GDP를 국내 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으로 나눈 값
- c.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 성과조사 대상연도의 R&D 과제 중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과제의 비율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GDP 대비 연구 개발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자원 생산성	
a. GDP 대비 연구 개발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b. 자원 생산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1-4.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 b. 친환경차 확대 : 연도별 친환경차 보급 수
- c.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IPCC에서 제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친환경차 확대	
a.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b. 친환경차 확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II.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중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목표와 지표, 그리고 지표별 목표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각 지표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귀하의 의견(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지표나 목표치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정방안과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지표별 목표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제언
인적 자원 개발	고등교육 이수율(%): 48('17) → 48('30)	
	학업성취도 국제평가(PISA): 85.5('17) → 85.6('30) (3과목 평균)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비율(%): 1.0('17) → OECD평균('30)	
기술 및 산업 발전	GDP 대비 연구개발비: 4.23('16) → 4.29('30)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2.27('16) → 3.03('30),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51.6('17) → 52.9('30)	
기후 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6('17) → 20('30)	
	친환경차 확대(만대): 9.7('17) → 88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 ₂): 694('16) → 608~574('30)	

Ⅲ. 응답자특성

1. 귀하의 직업군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교수 ②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③ 공무원 ④ 기타

2. 귀하의 과학기술분야 경력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① 3년 미만 ② 3년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부록 2] 사회복지분야 AHP 설문지

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목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설문지

No		ID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중장기 계획 집행실태 및 성과 평가체계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입니다. 본 설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목표와 성과 지표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사회복지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목표 및 지표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목표 및 지표의 우선순위를 AHP 설문방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합니다. 설문결과는 분석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각 설문문항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귀하의 전문성과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AHP 설문의 응답일관성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통계학적 설문문항은 통계 처리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일~8월 7일
주관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자 : 정해진 교수 (부산대학교)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AHP 설문문항의 구성과 응답방법

※ 기재요령

1. 아래의 각 행의 왼쪽과 오른쪽에 제시된 2개의 평가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2. 첫번째 행에서 ‘A.과학기술’이 ‘B.사회복지’보다 "매우 중요"하면 아래와 같이 왼쪽의 ⑦에 표시합니다.
3. 두번째 행에서 왼쪽의 ‘A.과학기술’이 오른쪽의 ‘C.정주여건’보다 "약간중요"하다면, 왼쪽의 ③에 표시합니다.
4. 세번째 행에서, 오른쪽의 ‘C.정주여건’가 왼쪽의 ‘B.사회복지’보다 “중요”하다면, 오른쪽의 ⑤에 표시합니다.
5. 만약, 두 평가항목의 중요성이 “같다”면, ①에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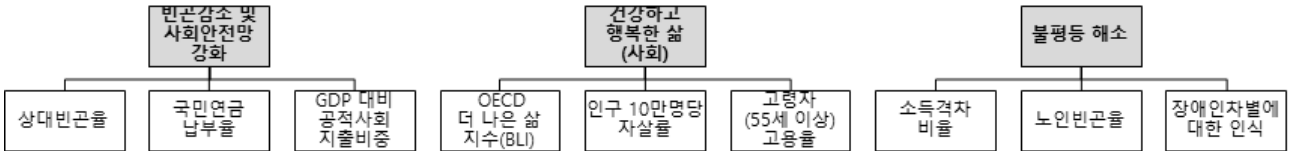
평가항목 (L)	중요도															평가항목 (R)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A.과학기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사회복지
A.과학기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정주여건
B.사회복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정주여건

※ 응답시 주의사항

1.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유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항별로 우선 평가항목의 순서를 먼저 정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습니다.
2. 응답의 일관성이란 만일 A가 B 보다 중요하고, B가 C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당연히 A는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분야 목표 및 지표의 우선순위 선정

본 설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목표와 중점관리지표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1-1.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추세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보장 수준 측정 지표
- B.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아동, 모성,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질과 건강 보장 측정 지표
- C. 불평등 해소 : 나이, 성별, 장애여부 등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 측정 지표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불평등 해소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불평등 해소

1-2.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상대 빈곤율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 빈곤율(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 b. 국민연금 납부율 :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유형별, 성별)의 보험료 납부율(%)
- c.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사회지출 즉, 국가가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규모의 비중(%)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상대 빈곤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국민연금 납부율
a. 상대 빈곤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b. 국민연금 납부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1-3. ‘건강하고 행복한 삶(사회)’ 목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자살인구 수(%)
- b.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OECD 발표 지수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지표(시민참여, 교육, 안전, 주거, 소득, 고용, 삶의 만족도, 환경,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하여 각국의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는 지수(BLI; Better Life Index)
- c. 고령자(55세 이상)고용률 : 55세 이상 고령자인구 집단 내 취업자 수 비율(%)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a. 인구10만명당 자살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
b.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

1-4. ‘불평등 해소’ 목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소득격차비율 : 국가평균 대비 소득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 b. 노인빈곤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1/2 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 비율(%)
- c.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우리사회 고용, 교육 등 생활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 존재 및 정도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소득격차비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노인빈곤율
a. 소득격차비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b. 노인빈곤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II. 사회복지분야 중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목표와 지표, 그리고 지표별 목표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각 지표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귀하의 의견(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지표나 목표치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정방안과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지표별 목표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제언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중위 가치분소득 50% 기준 상대 빈곤율: 13.8('15)→12.5('30)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 82.5('17) → 지속확대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 13('15) → 20.9('30)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24.3('17) → 11.9('30)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29위('17) → 지속확대	
	고령자(55세이상) 고용율(%) : 49.4('18)→55('30)	
불평등 해소	소득격차 비율(%) : 36.8('17) → 31('30)	
	노인빈곤율(%) : 46.5('17) → 31('30)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3.29('17) → 3.6('30)	

III. 응답자특성

1. 귀하의 직업군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교수 ②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③ 공무원 ④ 기타

2. 귀하의 사회복지분야 경력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① 3년 미만 ② 3년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부록 3] 정주여건 분야 AHP 설문지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목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설문지

No		ID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중장기 계획 집행실태 및 성과 평가체계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입니다. 본 설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목표와 성과 지표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정주여건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목표 및 지표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목표 및 지표의 우선순위를 AHP 설문방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합니다. 설문결과는 분석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각 설문문항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귀하의 전문성과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AHP 설문의 응답일관성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통계학적 설문문항은 통계 처리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일~8월 7일
주관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자 : 정혜진 교수 (부산대학교)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AHP 설문문항의 구성과 응답방법

※ 기재요령

1. 아래의 각 행의 왼쪽과 오른쪽에 제시된 2개의 평가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2. 첫번째 행에서 ‘A.과학기술’이 ‘B.사회복지’보다 "매우 중요"하면 아래와 같이 왼쪽의 ⑦에 표시합니다.
3. 두번째 행에서 왼쪽의 ‘A.과학기술’이 오른쪽의 ‘C.정주여건’보다 "약간중요"하다면, 왼쪽의 ③에 표시합니다.
4. 세번째 행에서, 오른쪽의 ‘C.정주여건’가 왼쪽의 ‘B.사회복지’보다 “중요”하다면, 오른쪽의 ⑤에 표시합니다.
5. 만약, 두 평가항목의 중요성이 “같다”면, ①에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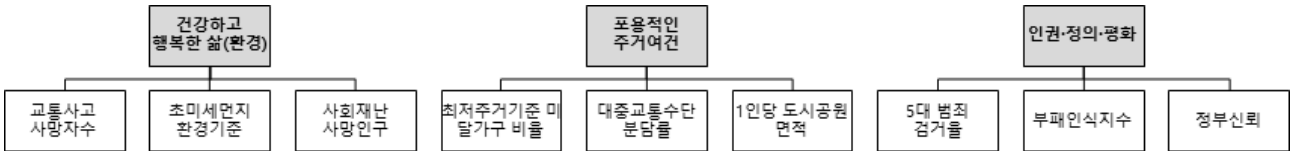
평가항목 (L)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R)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A.과학기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사회복지	
A.과학기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정주여건	
B.사회복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정주여건	

※ 응답시 주의사항

1.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유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항별로 우선 평가항목의 순서를 먼저 정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습니다.
2. 응답의 일관성이란 만일 A가 B 보다 중요하고, B가 C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을 경우, 당연히 A는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1. 정주여건분야 목표 및 지표의 우선순위 선정

본 설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기반으로 정주여건분야의 중장기목표와 중점관리지표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1-1.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정주여건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정주환경
- B. 포용적인 주거여건 :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여건
- C. 인권, 정의, 평화 : 정주여건 중 정치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여건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포용적인 주거여건
A.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인권, 정의, 평화
B. 포용적인 주거여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인권, 정의, 평화

1-2. '건강하고 안전한 삶(환경)' 목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교통사고 사망자수 : 연도별 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b.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 초미세먼지(PM_{2.5}) 발생량 감소
- c. 사회재난 사망인구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교통사고 사망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a. 교통사고 사망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사회재난 사망인구
b.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사회재난 사망인구

1-3. ‘포용적인 주거여건’ 목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소한의 주거면적 및 필수설비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 b.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의 비율
- c.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환경과 시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 1인당 확보한 도시공원의 면적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a.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a.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1인당 도시공원 면적	
b.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c.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4. ‘인권·정의·평화’ 목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5대범죄 검거율 :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등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
- b. 부패인식지수 :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c. 정부신뢰 : 중앙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항목
5대범죄 검거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부패인식지수	
5대범죄 검거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정부신뢰	
부패인식지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정부신뢰	

II. 정주여건분야 중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

다음은 정주여건분야에 관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목표와 지표, 그리고 지표별 목표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각 지표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귀하의 의견(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지표나 목표치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정방안과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지표별 목표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제언
건강하고 안전한 삶 (환경)	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0.08('17) -> 0.03('30)	
	초미세먼지 환경기준($\mu\text{g}/\text{m}^3$): 26('16) ->16('24)	
	인구 십만명당 사회재난 사망인구(명): 0.12('17) -> 지속감소	
포용적인 주거 여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9('17) -> 4.6('30)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31.3('17) -> 지속확대	
	1인당 도시공원 면적(m^2): 8.6('17) -> 11.6('30)	
인권 정의 평화	5대범죄 검거율(%): 78.8('17) -> 지속확대	
	부패인식지수(CPI) (100점 만점): 54('17) -> 지속상승	
	OECD 주요국가 정부신뢰도(%): 24('17) -> 지속상승	

Ⅲ. 응답자특성

1. 귀하의 직업군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교수 ②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③ 공무원 ④ 기타

2. 귀하의 정주여건분야 경력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① 3년 미만 ② 3년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민의 파트너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www.nafi.re.kr